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1995. 9.

余 仁 坤 (국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동서 냉전기에 구소련과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성과 군사동맹 조약을 기초로 이념, 정치, 군사, 경제 등 제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維持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과 한·소수교 및 소련의 붕괴로 러·북관계는 惡化된 상태에 있었으나 한반도 주변상황의 영향으로 새로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러·북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러 및 남북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 바, 한국은 周邊情勢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造成하기 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러·북관계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對應策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1991년말 소련 붕괴 이후의 러·북관계 변화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分析·展望하였다.

본 연구가 동북아 국제환경 및 러·북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5. 9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동서냉전기 동안 긴밀하였던 소·북한 관계는 1990년 한·소 修交를 계기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악화상태가 1992년 러시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持續되었다. 그러나 러·북관계는 1993년 후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현재 再定立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러·북관계의 변화추이를 分析하고 양국관계 강화요인과 갈등요인을 도출하여 양국관계의 전개방향을 展望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對러關係를 강화하고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蘇·北關係의 概要

김일성을 통해 북한에 친소 정권을 수립한 스탈린은 1945~1953년 시기에 통일전선전술과 무력을 통한 韓半島 共產化를 擘策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의 소·북한관계는 중·소 분쟁시 북한의 친중정책, 1970년대 김일성의 호전적인 對南政策 등으로 불편한 상황을 노정하기도 하였으나 1961년 체결된 軍事同盟條約을 기초로 잘 유지되었다.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 시대 초기에도 소·북한 관계는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外交政策으로 소·북한간 사회주의 연대성은 점차 약화되었고 한·소간에는 1990년 9월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졌다. 한·소수교는 소·북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상호 비난이 지속되었고 경제관계도 大幅 축소되었다. 특히 북한은 한·소수교 이후 군사력 증강과 체제유지 및 對美 修交를 위한 협상 카드용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 러·北關係의 變化推移

냉전종식 이후의 과도기적인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改革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제한적인 經濟開放 정책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소련이 崩壞하고 신생 러시아가 출범한 1992년부터 1993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제분야에서 惡化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상이한 국가정책 목표 때문에 과거의 양국간 사회주의 연대성이 완전 단절되었다는 점, 한반도 非核化政策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였다는 점, 또한 러시아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한국중심의 경협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외교정책 노선을 친서방정책으로부터 獨自 外交 중심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러·북관계는 1993년 후반기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의 시기에 상당한 수준으로 回復될 수 있었다. 이 시기 러·북관계는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 모색과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 및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 노력 등으로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 회복되는 樣相을

나타내었다.

1994년 후반기 이후 1995년 9월 현재까지의 러·북관계는 한반도 정세변화로 再定立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는 김일성 死亡 이후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면서도 북·소 동맹조약이 냉전종식 이후의 現實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 조약의 폐기 의사를 북한측에 通報하였다.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을 계기로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바, 러시아는 既得權 상실을 우려하여 군사면이 배제된 새로운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을 북한측에 提議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차원에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선린관계 유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양국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경협확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地理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협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3. 러·北關係 展望

현재 러·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인 地政學的 利害,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對北韓 영향력 유지 노력, 한·러 경협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러시아 보수파 지도자들과 북한의 접촉 확대 등이 양국관계를 強化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反面, 러·북관계에서 현재 표출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對러 債務償還 문제, 러시아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上記와 같은 러·북관계의 강화요인과 갈등요인 및 양국의 국내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의 러·북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展開될 것으로 예측된다.

政治面에서, 러·북 양국은 1994년 후반기 이후 재정립되고 있는 선린관계를 새로이 체결될 友好協力條約과 정치적 대화의 확대를 통해 발전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러시아는 1996년의 大選 및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 고조라는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한다는 동북아정책 基調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접경국가인 북한과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도 국제적 고립 脫皮를 위하여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동북아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豫想되는 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러·북 양국간 선린우호관계의 심화 정도는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접근 속도와 폭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북관계가 양국의 경제난으로 단기간내에 強化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권개념 적용과 북한의 러시아내 마약 밀매 등은 향후 양국의 外交摩擦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安保·軍事面에서, 러·북 양국은 동맹조약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안보차원에서 한·러관계 경우와 같이 군 고위인사들의 교류와 합정의 相互訪問 등을 통한 군사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는 러시아가 남북한에 대한 균형된 군사협력 관계,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접근에 따른 기득권 상실 방지 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의 開催를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소극적이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관련 부품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고 계속 試圖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는 양국간 안보·군사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經濟面에서, 러시아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할 것이고, 제한적인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도 短期間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回復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러·북 양국의 전반적인 경협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러·북 양국은 經協擴大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 러·북간 경협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中心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약 32억 루블에 달하는 북한의 對러 債務問題는 장기간 양국 경협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韓國의 對應方案

우리 정부는 안보와 對러關係를 강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政治面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對러 同伴者關係를 강화

하기 위하여 열린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되, 1996년 6월 次期大選을 앞두고 체르노미르딘 총리, 리즈코프 모스크바 시장, 온건개혁파 야블린스키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KEDO내에서 자국의 일정한 역할을 摸索하고 있는 바,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考慮하여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KEDO내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주요 부분공사에 대한 참여의 배려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中長期的으로 러시아는 북·미와 북·일 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對北韓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堅持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安保·軍事面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상업적 차원을 구실로 하는 對北韓 무기판매 가능성을 견제하고, 핵관련 부품의 북한으로의 밀수출과 핵기술자들의 개별적 북한 방문의 방지 등을 러시아측에 促求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核關聯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한 평화협정 締結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열린 態度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經濟面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주요 이해사항인 對러 投資를 러시아 경제의 회복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의 개방유도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가 提案하고 있는 한·러·북 3角經協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사업에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공동참여 方式을 택하고, 한·러·북 3각경협이 진전되는 경우 협력분야와 협력지역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開放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蘇·北關係의 概要	3
1. 고르바초프 以前 時期(1945~1985)	3
2. 고르바초프 時期(1985~1991)	7
가. 蘇·北關係의 變化와 韓·蘇 修交	7
나. 韓·蘇修交 以後의 蘇·北關係 惡化	11
第 III 章 러·北關係의 變化推移	18
1. 惡化期(1992年~1993年 前半期)	18
가. 社會主義 連帶性 斷絶	22
나. 러시아의 北韓 核開發 沮止	25
다. 러시아의 韓國中心 經協政策	29
2. 回復期(1993年 後半期~1994年 前半期)	32
가. 部分的 葛藤의 持續	35
나. 經濟關係의 正常化 摸索	40
다. 러시아의 武器販賣 再開	43
라. 外交關係 改善	47
3. 再定立期(1994년 後半期~現在)	50
가. 러시아의 金正日 政權 支持	54
나. 러시아의 軍事同盟條約 廢棄	57
다. 極東地域 中心의 經協擴大	59

第 IV 章 러·北關係 展望	65
1. 兩國關係 強化要因	65
가. 北韓에 대한 러시아의 地政學的 利害	65
나. 北·美와 北·日修交 可能性	67
다. 韓·러 經協에 대한 러시아의 不滿	69
라. 北韓과 러시아 保守派의 接觸 擴大	72
2. 兩國間 葛藤要因	74
가. 北韓의 人權問題	75
나. 北韓의 對러 債務問題	77
다. 러시아內 北韓의 不法行爲	78
3. 러·北關係 展開方向	79
가. 政治面	79
나. 安保·軍事面	82
다. 經濟面	83
第 V 章 韓國의 對應方案	85
1. 政治面	85
2. 安保·軍事面	87
3. 經濟面	90
參考文獻	92

第 I 章 序 論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후 45년 동안 지속되었던 東西冷戰이 1980年代 말 동구 사회주의권 변혁과 1990년 10월 독일통일 및 1991년말 소련 붕괴 등을 계기로 종식됨에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新國際秩序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3각체제와 중·소·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3각체제간의 냉전적 군사대결 구도가 消滅되었고, 지역적 차원의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域內國家들은 안보와 경제면에서 國益 極大化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9월 30일 舊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 있는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정에 影響力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舊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국내 개혁에 노력하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諸分野에서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동서 냉전기에 이념,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긴밀하였던 소·북한 관계는 한·소수교 이후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소련의 崩壞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러·北關係는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양국의 이해일치로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回復·再定立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

나 동북아 지역차원의 국제질서는 아직까지 再編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바, 이러한 러·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통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과거 3년 및 향후의 러·北關係를 분석·전망하고 유리한 안보·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본 연구는 5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第2章에서는 1992년 이후의 러·북관계 변화를 理解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1945부터 1991년까지의 소·북한 관계가 개괄적으로 분석·서술되었다. 第3章에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 러시아가 출범한 1992년부터 1995년 9월 現在까지의 러·북관계 변화추이가 악화기(1992년~1993년 전반기), 회복기(1993년 후반기~1994년 전반기), 재정립기(1994년 후반기~현재)의 3時期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러·북관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각 시기마다 양국관계에 影響을 미치게 된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들이 우선적으로 고찰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시기별 러·북관계의 特徵이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분석되었으며, 시기별 러·북관계가 동북아 세력균형과 러시아의 對美, 對日, 對中, 對韓關係에 미치는 영향도 서술되었다.

第4章에서는 양국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들과 양국간에 노정되고 있는 갈등요인들을 導出함으로써 향후 러·북관계의 展開方向에 대한 분야별 전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第5章에서는 한국이 안보를 공고히 하고 對러關係를 강화하며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정치, 안보·군사, 경제면에서 제시되었다.

第 II 章 蘇·北關係의 概要

1. 고르바초프 以前 時期(1945~1985)

1945년 8월 韓國解放 이후부터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집권 이전까지 소·북한관계는 대체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2期로 區分될 수 있다.

第1期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통해 북한에 친소 정권을 수립하는 한편, 兩者가 통일전선전술과 무력을 통해 韓半島 共產化를 추진하던 1945~1953년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스탈린의 구상은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방지하고 國際狀況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공산혁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다.¹⁾ 그는 이러한 자신의 구상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종료직 전 對日戰에 참전하여 극동으로의 팽창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희생으로 안보를 확고히하고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推進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8월 15일 제안한「일반명령 1호에 따라서 북한 지역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對日戰 종료 직후 김일성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발하여 북한 점령지역에 파견하고, 同年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제1서기로 선출하여 「민주기지」론을 주장하

1) Egbert Jahn, "Sowjetische Weltpolitik," in Manfred Knapp and Gert Krell (eds.), *Einfü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ue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pp. 121~122.

는 등 한반도에서 親蘇 共產政府의 창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소군정 당국은 1946년 초부터 북한 점령지역에서 「북조선 노동당」창설과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 일련의 체제개혁을 통하여 친소 공산정권 창출을 企圖함으로써 소련 극동지역에 자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한편,²⁾ 통일전선전술을 통하여 韓半島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수행하였다.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 정부가 樹立된 이후, 중국에서는 무력에 의한 공산화가 1949년 10월 달성되었다. 스탈린은 한반도에 친소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宣言」에서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김일성의 무력남침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전쟁을 위한 군수물자와 약 7만명의 공군을 중국 공군으로 위장하여 지원하였다. 북한에 革命을 수출하여 所謂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설한 소련이 김일성의 무력남침을 지원하여 남한지역까지 공산화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정책은 理念的인 측면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戰略的 利害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소련은 중국 견제, 아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관여 방지, 일본에 대한 군사경제·외교·심리적인 影響力 행사, 不凍港 획득 및 극동지역의

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美蘇共同委員會(1946. 3. 20~5. 8)에서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대장은 소련의 극동안보를 고려하여 “소련은 진실로 民主的이며 獨立的이고 소련에 友好的인 그래서 장차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지 않는 한국에 중대한 利害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6*, vol. VIII (Washington D. C.), p. 653.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 확보 등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³⁾

第2期는 소·북한간의 제반관계가 간헐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노정하기도 하였으나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즉 軍事同盟條約을 기초로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던 1953~1985년 시기이다. 소련은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자 미국의 對蘇 封鎖政策과 중·북한간의 관계 긴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의 전후 재건과 산업화 및 군사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치면에서 당시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관계는 한국전쟁중 ‘의용군’ 파견에 의한 중·북한의 긴밀한 관계, 전쟁중 소련의 제한된 지원으로 인한 김일성의 對蘇 不信, 소련 외교의 유럽중심주의, 소련의 제한된 경제원조에 대한 김일성의 불만족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다.

1950년대 말부터 惡化되기 시작한 소·북한관계는 중·소 분쟁기에 김일성의 對蘇 및 對中 二重外交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소원한 상태에 있었다. 동서진영간의 冷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과 북한은 1961년 7월 6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자 북한은 중국에 동조하여 흐루시초프의 對美 굴욕외교를 비난하였으며,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對北韓 원

3) Basil Dmytryshyn,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in Jae Kyu Park and Joseph M. Ha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p. 4 참조.

조를 삭감하였다. 이와 같이 소·북한간에는 외교정책과 이념면에서 상이한 입장이 견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긴장이 상호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1964년 흐루시초프의 失脚, 1965년 2월 코시킨 소련 수상의 평양 방문, 문화혁명 시기의 중·북한 관계의 악화 등 때문에 소·북한관계는 다시 改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와 평양 관계는 다시 새로운 緊張을 맞게 되었다. 그 원인은 첫째, 김일성의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1973년 이후 중국 주도의 비동맹 가입 노력, 둘째, 김일성의 個人崇拜 政策에 대한 소련의 비난과 북한의 친중정책에 대한 소련의 압력, 셋째, 김일성의 호전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소련의 반감 등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호전적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再發되는 경우 미·소가 동맹조약으로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소관계의 악화와 데탕트의 終熄, 중국의 개입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 등 소련의 안보이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⁴⁾ 따라서 소련은 이 시기에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支持하지 않았다.

동서진영간의 新冷戰期에 소·북한관계는 다시 강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소련은 미국의 對蘇 강경정책 뿐만 아니라, 「일·중간 평화 및 우호조약」체결과 미·중관계 正常化로 인한 미·일·중 3각 협력체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전략

4) Donald S. Zagoria, "The Kremlin Looks Bad in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I, no. 1 (Spring/Summer 1983), pp. 123~124.

적, 지정학적 위치를 증시하고 북한에 대한 軍事協力을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도 중국의 개방정책에 불안을 느끼고 카터 미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동결 결정에 크게 실망하여 對蘇關係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1984년 5월 18년만에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정치, 경제, 군사원조를 획득한 반면, 소련은 북한에 ① 소련 군사기지내에서 북한군의 재교육, ②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 派遣, ③ 청진, 원산 양항의 군사적 이용, ④ 전략무기체제의 통일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①항에만 동의하고 ③항에는 나진항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다른 사항들은 拒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이 시기 군사분야에서 소·북한간의 긴밀한 關係는 1984년 11월 카피차 아시아 담당 소련 副外相의 북한 방문시 체결된 「조·소 국경통과에 관한 조약」과 MIG-23 전투기, T-23 탱크, 신형헬기 등의 제공문제, 원산 및 청진항 사용문제, 공동 군사훈련 실시문제 등의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김일성의 訪蘇 이후 소·북한관계는 정치와 경제면에서 현저히 긴밀하게 되었다.

2. 고르바초프 時期(1985~1991)

가. 蘇·北關係의 變化와 韓·蘇 修交

고르바초프 시대 초기에 소·북한관계는 현저하게 발전되어 각

5) 다케사다 히데시, “最近의 蘇·北韓 接近의 背景 - 北韓의 軍事戰略을 중심으로 -,”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 第6輯, 1987), pp. 278~279.

分野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다. 양국간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한반도 核武器 自由地帶 창설에 관한 북한 제안의 실현을 촉구하였다.⁶⁾ 1986년 10월에 김일성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소련은 軍事面에서 MIG-23 전투기, T-72형 탱크, 첨단장비의 유도미사일, 대형 헬기 등의 최신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對價로 북한 영공의 군사적 이용권을 획득하였다. 이 당시 소·북한의 政策目標은 1986년 1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訪北時 발표된 공동성명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同 聲明에서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帝國主義 諸國」의 군사적 우위달성 노력, 극동에서 미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 증대, 한국의 핵기지화, 한·미·일간 「NATO 형의 新軍事政治同盟 창설의 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공동성명은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의 창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에 의한 不可侵 宣言, 서울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등의 북한 제안을 지지하고 4強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이나 유엔 동시가입 또는 분리가입에는 反對한다고 밝혔다.⁷⁾

소련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對北韓政策을 추진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 소련은 레이건 美大統領의 극동 군사력 강화와 한·미, 미·일의 전략적 협력강화가 자국의 극

6)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p. 42.

7) 우아 후미오, 「고르바초프時代의 蘇聯의 韓半島政策」,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pp. 213~214.

동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시하게 되었다. 둘째, 중국이 정치, 경제면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對北韓 關係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소련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強化하여 극동에서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立脚한 소·북한간의 사회주의 연대성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고르바초프가 對韓國政策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를 공동이념으로 하는 북·소간의 連帶性은 한·소수교시까지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에 의해 점차 弱화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는 경제악화와 이에 따른 체제위기를 克服하기 위하여 서방과의 이념대립, 군비확대, 북한 등 제3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과 개입 등의 정책보다는 대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新思考」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1967년부터 主體思想을 공식 표방한 바 있는 북한은 중소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獲得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유례가 없는 봉건적인 부자세습의 권력승계를 構築하고 있었다.⁸⁾ 이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지원도 縮小될 수 밖에 없었고, 한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의 지위가 약화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소련의 「신사고」외교정책과 脫冷戰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

8)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Oct. 13~14, 1992), pp. 2~5.

하려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물려 추진된 결과 한·소관계가 급진전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위협스런 긴장을 除去할 뿐만 아니라, 全 韓國民의 민족문제 해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⁹⁾고 시사하고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¹⁰⁾ 한·소간의 정치관계는 1988년 가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의 對韓國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급속히 발전되었다. 당시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주임으로 한반도문제 專門家인 K. 보가투로프 박사에 의하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였던 소련 언론인들과 정부 인사들은 귀국한 뒤 對韓關係에 대한 새로운 자세에 찬성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立場이 좀 더 현실적이고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다.”¹¹⁾

이러한 배경으로 한·소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直交易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9월 30일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다. 양국은 國交正常化를 통해 과거 40여년간 유지되었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양자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획기적인 轉換點을 마련하였다. 반면, 한·소수교는 소·북한간 사회주의 연대성이 사실상 단절되는 것을 意味하는 사건이었다.

9)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p. 42.

10) *Sowjetunion Heute*, Nr. 10, Oktober 1988, Dokumente, p. V.

11) 「조선일보」, 1990. 12. 14.

나. 韓·蘇修交 以後의 蘇·北關係 惡化

한·소간의 국교정상화는 45년간 유지되었던 소·북한관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契機가 되었다. 1990년 9월 2일 평양에서 개최된 金永南-세바르드나제의 북·소 외상회담시 소련 대표단은 북한측에 한·소 국교정상화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북한은 동월 19일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김영남이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備忘錄을¹²⁾ 소련측에 전달했다고 밝힘으로써 북·소간 갈등이 대외적으로 공식 表出되었다. 한편, 세바르드나제는 한·소수교 직후 「이즈베스티야」지에 게재된 기고문을¹³⁾ 통해 한·소수교의 背景을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소련의 노력, 둘째, 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경제·군사국가로서 한국의 등장, 셋째, 양국관계의 다양하고 肯定的인 발전 전망 등으로 설명하고, 한·소수교가 남북한 관계개선과 아태지역의 평화보장 및 안정을 위해 必然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소련이 북한과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지속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소수교와 관련된 소·북한간 언론 攻防戰과 강도 높은 상호비난 攻勢는 1991년 8월 舊소련에서 보수강경파에 의한

12) 북한이 소련측에 전달한 備忘錄에는 한·소수교가 2개의 조선을 合法化시킨다는 점, 소련은 미국과 함께 남북분단에 대한 責任이 있다는 점, 한·소수교는 한국 정부의 北方政策을 도와준다는 점, 소련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음모에 가담하여 三角結託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조·소 동맹조약이 자동적으로 有名無實해 진다는 점, '남조선 인민'의 統一意志를 꺾는다는 점 등 6개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외통신」, 종합판 (42) (1990. 7. 1.~12. 31), p. 249.

13) 鄭一永 編, 「韓·러 關係와 金泳三 大統領: 러시아의 對韓半島 關係 資料集 (1986~1994)」, (城南: 世宗研究所, 1994), pp. 293~297.

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북한은 1990년 10월 5일자 「로동신문」에서 ‘달리로 파고사는 외교관계’ 題下의 글을 통해 한·소 국교정상화를 동맹국인 북한에 대한 배신, 한반도 통일에 逆行하는 분열주의 행동,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소·한 3각 결탁관계 형성, 소련의 존엄을 팔아넘긴 외교관계 등으로 맹렬히 非難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련도 즉각 반박하였는 바, 모스크바 방송은 同日 ‘한반도에 2개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소수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국과 수교한 소련을 비난하면서도 일본과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의 兩面性을 비판하였다. 이후 소련의 방송과 신문들은 북한을 스탈린이 세운 사회주의국가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正統性을 부인하고 김일성-김정일 父子世襲 체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차승인의 필요성을 적극 主張하였다.¹⁴⁾

한·소수교에 따른 이와 같은 소·북한관계 악화 때문에 북한은 10월 10일 黨 創建 45주년 행사에 소련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았으며, 소련도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북·소간 연례행사인 10월 12일 수교 42주년 기념행사도 開催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12월 “북한 현실을 비객관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소련 「노보스티」 통신 평양지국을 閉鎖시키고 공산청년동맹 기관지 「콤소몰

14) 「모스크바 방송」, 1990. 10. 9; 「내외통신」 종합판 (42) <1990. 7. 1.~12. 31> p. 195 & 256~257.

스카야 프라우다」지의 평양 특파원에 대한 승인도 거부하였다. 한·소관계가 12월 노태우 大統領의 소련 방문과 1991년 4월 제주도 정상회담 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소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확대를 소련의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看做함에 따라서 북한은 일련의 한·소 정상회담을 ‘추악한 외교’, ‘범죄적 공모’, ‘달리로 끌어 당긴 회담’ 등으로 비난을 계속하였다.¹⁵⁾ 또한 소련도 북한이 同年 8월 소련에서의 쿠데타 사태를 이유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시킨 것을 비난하고, 쿠데타 브리핑에 한국 등 각국 大使들을 초청하였으나 북한 대사는 제외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한·소수교 이후 북·소간의 상호비난이 계속되었고, 체제개혁을 통하여 스탈린식 統治體制를 청산하고 레닌주의에 입각한 「인도적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던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1991년 8월 보수·강경파의 쿠데타에 直面하게 되었다.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실각 다음날인 8월 20일 「로동신문」에 ‘사회주의 승리가 역사적 필연’이라는 長文의 논설을 게재하고, 소련 지도부의 보수회귀 움직임에 크게 고무되어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 사태가 3일만에 反轉되고 고르바초프가 복귀함에 따라서 북한의 사태 오판은 적지않은 대내외적 압력을 받게 되는 부담을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북·소관계가 결정적으로 惡化되었고, 소·북한간의 사회주의 연대성은 1991년 12월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완전 斷絶되었다.

15) *Pravda*, 1991. 4. 23.

經濟面에서 북한은 전력의 60%, 강재의 33%, 석유화학 제품의 50%, 섬유의 40% 등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전체 무역고 가운데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比率은 매년 45~50% 수준이었다.¹⁶⁾ 특히 소·북한은 1986년 10월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契機로 2000년까지 상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한 바 있었다. 소련은 북한에 공장건설과 원료 및 기술을 支援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량의 일부를 소련에 환부한다는 것이 이러한 협력체제의 한 形態이었다. 그러나 소·북한간에 합작생산되는 제품들이 계획된 대로 소련에 전량 환부되지 않고 있었고, 이와 함께 한·소수교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북한간 경제관계도 급속히 冷却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소수교를 앞두고 있던 소련은 신문과 방송 등 言論을 통해 북한 경제가 構造的인 모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對北韓 경제원조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 북한이 소련과 체결한 각종의 경제협력 約束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책임이 '조선지도자'들, 즉 김일성-김정일에 있다고 批判하였다.¹⁷⁾ 또한 경제 상황의 악화에 직면하게 된 소련은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訪北時 對北韓 원유공급에 대해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30% 수준의 혜택을 주던 우호가격에 의한 원유공급도 국제가격으

16) 「내외통신」 종합판 (42) (1990.7.1~12.31), p. 165.

17) 「내외통신」 종합판 (42) (1990.7.1~12.31), p. 377~380.

로 전환시키는 措置를 취하였다.¹⁸⁾ 소·북한간 무역은 현물상환 방식이나 합작생산 물품으로 변제하는 구상무역 方式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소련은 1990년 11월 2일 모스크바에서 북한과 「무역대금 경화결제 협정」을 체결하여 1991년부터 무역거래를 국제가격에 따라 현금결제하는 등 순수 상업베이스로 轉換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對蘇 무역거래에서 과중한 외화 부담을 안게 되었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8.1%로부터 1991년 14.1%로 대폭 減少되었다. 북한의 對蘇 무역량도 <表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0년 11억 4,200만 달러로부터 1991년 3억 6,47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表 1> 남북한의 對舊소련 및 對러 교역실적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북한	수출	440.5	171.0	65.2	54.0	
	수입	701.5	193.7	227.1	169.0	
	계	1,142.0	364.7	292.3	223.0	80.0
한국	수출	519.1	625.1	364.6	601.2	961.9
	수입	369.7	577.3	494.5	974.8	1,229.7
	계	888.8	1,202.4	859.1	1,576.0	2,191.6

註: 1992년 이후는 남북한의 對러 교역실적임.

出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지역경제」(1995. 5), p. 232; ロッア東歐貿易會, 「ロッパ東歐貿易調査月報」(1995. 3), p. 4; 「동아일보」, 1995. 3. 16.

18) 과거 舊소련은 우호가격 기준으로年間 80만톤 규모의 원유를 물물교환 방식으로 북한에 輸出하여 왔다.

또한 이 시기에 注目할 점은 북한이 한·소수교에 자극되어 핵개발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1965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영변에 2 MW의 연구용 원자로1기와 방사화학시설을 최초로 建設하였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제를 받았고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첩보위성은 1986년 이후 영변에서 또 다른 원자로 1기가 稼動中이며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IAEA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건설중인 것을 探知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IAEA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1990년까지 이를 拒否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 보유 전술핵 철수에 관한 미·남북한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한 남북회담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소수교와 관련, 소련에 대해 자체 핵개발 意圖를 천명하였다.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한·소수교의 不可避性을 역설하였을 때, 金永南 외교부장은 고르바초프가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평양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는 義務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⁹⁾

한국 정부는 南北對話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켜 12월 28일 노태우 大統領의 특별성명을 통해 한국내에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내외적

19) *Izvestiya*, 1994. 6. 15.

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 31일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소련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안보와 국제적인 핵확산금지 체제를 위협하는 要因으로 등장하였다.

第 III 章 러·北關係의 變化推移

1. 惡化期(1992年~1993年 前半期)

신생 러시아가 출범한 1992년부터 1993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冷戰終熄에 따른 동북아 신국제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연대성의 단절과 러시아의 북한 핵개발 저지 및 한국중심 경협정책 등으로 諸分野에서 한·소수교 이후 惡化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냉전종식 이후 世界秩序는 미국이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를 地域的 下位體制들(regional subsystems)이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의 하위체제는 민주주의 확산과 경제 및 제도적 상호연결로 인하여 西歐를 중심으로 국가간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안정된 多極體制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동북아지역의 하위체제는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체제와 독자적인 경제발전 전략 및 강한 민족주의 등으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過渡期 상태에 있다. 즉 동북아 新國際秩序는 소련 붕괴 이후 역내국가들의 동반자관계 구축²⁰⁾과 군축조치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지역데탕트 추세가 확산되고, 역내국가들이 이념보다는 경제를 중시함에 따라서 양자간 및 다자간 경협이 활성화되는 特徵

20) 1992년 1월 「트료선언」에서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同年 2월 「캠프 데이비드선언」을 통하여 미·러간 동반자관계, 10월 아키히도 일본 국왕의 訪中을 계기로 아시아 안정을 위한 일·중간 우호관계 유지가 각각 합의되었다.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안보면에서 역내 국가들의 利害相衝으로 냉전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불안정 국면에 있으며 역내국가간 경제마찰도 露呈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의 이와 같은 世界秩序 속에서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을 外交目標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 중심이 아닌 지정학적 이해 중심의 外交政策을 수행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진자본·민주주의권으로의 편입, 접경국가들과의 선린관계 구축, 선진국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및 투자와 경제지원 유도 등으로 확정하고,²¹⁾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大西洋主義(Atlanticism) 외교정책, 즉 미국과 EC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서방 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²²⁾

東北亞情勢와 관련, 러시아는 냉전종식으로 동북아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간 상호 의존성이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내국가들과 善隣關係를 유지하고 역내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역내에서 指導的 역할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21) Andrey Kozyrev, "Transformation or Kafkaesque Metamorphosis: Russia's Democratic Foreign Policy and Its Priorities,"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7 August 1992, p. 25.

22) 러시아가 이 시기에 親西方 外交路線을 채택하게 된 것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單極體制로 대체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認識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3 January 1992, p. 5 참조.

역내 영향력 증대, 중국과 國益 對立의 가능성,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 역내의 영토분쟁 가능성 및 역내 경제관계의 불균형 등에 대한 憂慮感을 갖게 되었다.²³⁾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역내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소련의 崩壞로 약화된 아·태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고,²⁴⁾ 이러한 政策目標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김정일로의 權力移讓을 위한 우호적인 대외환경 구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대외경제 개방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정책을 遂行한 것으로 분석된다. 1967년부터 '주체사상'을 표방해 온 북한은 1980년대 말 중국과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改革과 開放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1991년 5월부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²⁵⁾를 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同年 12월 김정일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칭호 수여 및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취임 등을 통하여 權力世襲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0년 -3.7%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한 이후 계속

23) Viktor Stefashin,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pp. 67~77.

24) 이 시기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民族統一研究院, 「日本の國際的 役割増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研究報告書 92-04, 1992. 10), pp. 287~314 참조.

25)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標榜은 인민대중을 일방적 지배대상이 아닌 수령과 통일체라는 명분과 대중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동구와 구소련에서 발생한 民衆蜂起를 예방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1993), p. 51.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심각한 식량과 에너지난에 直面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체제를 존속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며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등을 摸索하는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제한적인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²⁶⁾ 특히 북한은 서방으로부터의 체제인정, 미국 및 일본과의 修交를 통한 경제난 극복, 남한에 대한 군사력 우위확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로써 核開發에 박차를 가하였다.

사회주의와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改革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摸索하려는 북한간의 국가정책 목표의 상이성은 1992년부터 1993년 전반기까지의 양국관계를 特徵짓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992년 이후의 러·북관계는 이러한 배경과 함께 소련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연대성의 斷絶과 러시아의 북한 핵개발 저지 및 한국중심 경협정책 등으로 1993년 여름까지 전반적으로 惡化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26) 1984년 9월 외국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合營法 제정·발표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의 自由經濟貿易地帶 설정 이후 북한의 제한적인 대외경제 개방정책은 1992년 후반부터의 나진 개발착수 및 同年 10월 이후 각종 외자유치 관련법들의 제정·발표 등으로 나타났다.

가. 社會主義 連帶性 斷絶

이념면에서 舊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소련이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로 승인한 1948년 10월부터 1990년 9월 한·소修交時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표방하였는 바, 이에 따라서 對北韓 關係도 과거의 이념적·군사적 특수관계를 배제한 우호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제분야에서 계속되어온 모스크바와 평양이 理念的 차이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과거에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와 선린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²⁷⁾는 立場을 취하였다. 즉 러시아는 동북아질서 재편과 對韓國 關係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對北韓 關係를 이념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익을 기초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였다. 反面 북한도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됨에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한 구성국가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는 한편, 關係定立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연대성의 단절로 1993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舊소련 시대와 비교할 때 제분야에서 현저히 축소되었다. 정치와 군사면에서의 러·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²⁸⁾

27)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p. 29.

政治面에서, 열친 대통령의 특사 로가초프는 1992년 1월 평양을 방문, 북한 副主席 李鍾玉 및 외교부 제1부부장 姜錫柱와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국제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으나 김일성과 면담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방송과 언론들도 로가초프의 방문을 意圖적으로 축소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양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현안에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파데예프는 1992년의 러·북관계와 관련 “러시아와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계속했다”²⁹⁾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소수교에 따른 소·북한 관계의 악화가 1991년 말 소련의 崩壞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러·북관계가 이 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1월 평양을 방문한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 측과 친선관계를 강화한다는데 見解를 같이 하였으나, 쌍방은 북한의 남북 상호핵사찰 수용 등 일련의 현안들에서 의견차를 露出하였다.

軍事面에서 러·북관계의 큰 변화는 러시아가 1961년 체결된 동맹조약 제1조 자동군사개입 규정을³⁰⁾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시

28)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다 節의 ‘러시아의 韓國中心 經協政策’ 참조.

29)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no. 1 (London: EIU, 1993), p. 33.

30) 북·소 同盟條約 제1조는 “체약국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지체없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물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s s narodnoy Koreey 1945~1980*,

사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 외무성은 소련의 解體 직후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며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61년 조약이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밝혔다. 이는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존속되는 경우 러시아가 韓半島에서의 군사분쟁에 항상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對美와 對韓國 신뢰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31)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로가초프의 訪北時 등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동맹조약의 개정 불가피성을 수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맹조약은 1996년 9월 10일까지 有效한 바, 러시아는 동 조약을 계속 유지하되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立場을 취하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同條項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³²⁾ 또한 독립국가연합의 군사대표단은 1992년 3월 평양을 訪問하여 북한 군사대표단과 「CIS군과 북한군간 92~93년도 군사교류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同協定의 주요 내용은 군사대표단과 군함 및 소규모 항공부대의 상호 교환방문, 북한군과 러시아 극동군관구간의 우호관계 발전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pp. 196~198. 따라서 북한이 먼저 挑發하여 무력침공을 당하더라도 소련은 自動的으로 즉각 介入하도록 되어 있었다.

31)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3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4 March 1992, p. 26; *Izvestiya*, 1992. 8. 13.

등에 관한 것이었다. 當時 독립국가연합측 대표단 단장이었던 삼소노프 총참모장은 북한이 원한다면 武器를 현금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북·소 동맹조약 및 독립국가연합과 북한간의 군사협력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는 남북한이 軍事對峙를 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안보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公式的인 안전보장도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攻守同盟의 성격을 가졌던 북·소 동맹조약이 防禦的 軍事同盟으로 약화된 것은 러·북간 사회주의 연대성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소련 공산당을 해체한 基礎 위에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없는 狀況에 처해 있었고, 단지 국내개혁 수행을 위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무기판매 등을 통해 經濟的 實益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對北韓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對北韓政策은 舊소련 시대의 이념적 結속관계를 체제유지에 이용하려는 북한의 對러政策과 차이를 노정함으로써 이 시기 러·북관계 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

나. 러시아의 北韓 核開發 沮止

러시아는 舊소련과 마찬가지로 韓半島 非核化 政策을 추진하고

33) 「내외통신」 종합판(45) (1992. 1. 1~6. 30), p. 167~168.

있다. 이는 러시아가 접경국가들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국익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도 必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前述한 바와 같이 한·소수교에 자극되어 핵개발을 본격화하였는 바,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이 시기에 러·북관계를 惡化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핵안전협정」에 署名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중대한 進展으로 간주하였으나,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IAEA 등 國際機構를 통하여 확인하려 하였다.

북한의 모든 상황은 舊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KGB) 第6局과 사회주의국가들의 안보문제를 담당하던 第11局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舊소련 시대의 정보들을 기초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핵 보유국으로서의 등장을 위하여 김정일 지도하에 핵개발에 착수하였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1990년頃 핵 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同事實의 은폐를 위하여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으며, 플루토늄 추출상의 문제 등 능력 부족으로 완전한 핵개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對美 수교 및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³⁴⁾

34)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4 June 1994, pp. 11~12; 「한국일보」,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친 IAEA의 임시사찰을 받았으나 군사목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豫測되는 영변의 2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서방측의 핵개발 疑惑을 더욱 증폭시켰다. 다행히도 북한은 6월 11일 NPT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핵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정치적 決斷을 내리는 경우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³⁵⁾ 북한의 핵개발을 지역불안 요인으로 看做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992년 말 모스크바 공항에서 북한으로 탈출하여 핵기술을 이전하려던 30명 이상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制止하는 등 자국 핵과학자와 핵연료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IAEA의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양에 壓力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러시아의 對北韓 壓력과 관련, 「모스크바 방송」은 1992년 6월 3일 한국측의 남북한 상호핵사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한간의 신뢰 분위기 造成을 위해서도 평양측 핵대상들이 한국의 핵사찰원들에게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옐친 大統領은 8·15 解放 47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에게 친서를 보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핵무기 개발 중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NPT

1992. 7. 30.

35)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漢陽大 中蘇研究所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 1993. 6. 1), p. 104.

탈퇴 선언시 NPT 잔류 및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聲明을 발표하였고, 북한의 NPT 탈퇴유보 결정과 관련하여 평양이 미국과 러시아 등 핵강대국의 설득과 압력을 받아들인 결과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評價하였다.³⁶⁾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國際共助體制와 관련,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訪韓時 러시아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을 것과 북한 핵문제를 타국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이용할 計劃임을 밝혔다. 또한 옐친 대통령은 6월 부시 美大統領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남북한간에 채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과 남북한 상호핵사찰 수용을 促求하였고,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관련 當事國들과 향후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 緊急會談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³⁷⁾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上記와 같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과 共助體制를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NPT 조약의무 이행에 관한 북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IAEA간의 회담에서는 肯定的인 결과

36)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6 June 1993, p. 12; 「조선일보」, 1993. 6. 15.

37) 「讀賣新聞」, 1993. 3. 18.

가 도출되지 않았는 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러·북간 갈등은 지속되었다.

다. 러시아의 韓國中心 經協政策

1992년부터 1993년 전반기까지 러·북관계 惡化 原因中 하나는 러시아의 對北韓 경제관계 소원과 한국중심 경협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崩壞 이후에도 러·북 경제관계는 소원상태가 지속된 반면, 한·러 경제관계는 擴大되었다. 1992년부터의 전면적 경화결제에 따라서 러·북간 무역량이 계속 감소하였고, 북한이 전체량중 약 1/3을 舊소련에 의존하고 있던 원유,³⁸⁾ 석유제품, 석탄, 피탄 등 연료와 에너지 輸入도 1/10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북한은 전력과 에너지 危機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러·북간의 시베리아 산림개발 합작사업도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심각한 摩擦을 빚었다. 舊소련 시대에 소·북한은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 협정」, 소위 임업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1967년 이후 약 1만 5,000~2만 5,000명의 북한 勞動者들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등 17개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목재벌채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러·북은 1993년 2월 「임업공동위원회」 臨時會議를 개최하고 제반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러시아측은 북한측이 벌목 노동자,

38) 「러시아 경제학 연구소」의 評價에 의하면 북한의 원유 수입은 1990년 50만 톤, 1991년 42만 톤, 1992년 2만 5천 톤으로 각각 減少되었다.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學術세미나, 1995. 5. 3), p. 1.

전문가들의 부족 등으로 1991년에 합의된 목재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現地의 자원과 연료 및 에너지 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抗議하였다. 북한측도 러시아의 높은 철도화물 수송비 등 현실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不滿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 특히 러시아 연방의회는 북한 벌목장내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발하여 1993년 末로 滿了되는 임업협정을 파기하거나 인권개선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북한측에 요청하였는 바, 同 問題를 둘러싼 러·북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반면, 舊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1960년대 초에 농업후진국에 불과하였던 한국이 과거 30년간 수출주도 정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1980년대 中盤에 중진공업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국민총생산(GNP) 6천 8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달러로 成長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進入할 것으로 예측하게 되었다.⁴⁰⁾

경제난 克服과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기와 같은 認識을 기초로 한국과의 전반적인 경험 확대에 利害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인적 교류를 통한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습득, 對韓國 무역관계의 조정 및 양국간 무역장벽과 장애 제거, 한국의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군

39) 「내외통신」 종합판(47) (1993. 1. 1~3. 31), pp. 111~112.

40) Victor I. Shipaev, "A New Russian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Il Yung Chung (ed.), *Korea and Russia: Toward the 21st Century*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pp. 128~134.

수산업의 민수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對韓國 채무문제의 해결 등을 희망하였다.⁴¹⁾ 반면 한국은 상호 경제보완 관계의 강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구축 및 북한의 개방유도 등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對러 經協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러간의 이와 같은 이해일치로 <表 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양국 무역은 전년도 對比 83%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증가와 러시아 市場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양국간 무역확대를 위한 제도적 基盤構築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投資面에서 1990~1993년 기간중 한국은 총 6억 달러를 투자하였는 바, 미국(42억 달러), 프랑스(15억 달러), 독일(14억 달러)에 이어 第4位를 차지하였고 일본(0.3억 달러)을 능가하였다.⁴²⁾ 러시아의 한국중심 경협정책에 따른 이와 같은 한·러 경협의 점진적 擴大는 러·북 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시기 러·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結局 1992년부터 1993년 전반기까지 러·북관계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1990년 9월 수립된 한·소 修交의 영향, 러시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41) 1992년 11월 열린 대통령의 방한시 발표된 「한·러 기본관계조약」과 「한·러 공동성명」; Mikhail L. Titarenko,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 15 참조.

42) 로쯔아東歐貿易會, 「로쯔아東歐 經濟速報」(1995. 1. 15), no. 977, p. 7.

고수에 의한 理想的 連帶性 단절, 북한 핵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對北韓 압력 및 국제공조체제 참여,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실익 확보를 위한 러시아의 한국중심 經協政策 등으로 경색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추진되었던 러시아의 친서방 외교정책과⁴³⁾ 러·북관계의 악화로 東北亞 勢力均衡은 한, 미,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兩者關係와 관련, 러시아의 對中 무기판매를 둘러싼 미·러간 갈등과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러간 이전 상존에도 불구하고 미·러와 일·러 및 한·러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하여 共助體制를 유지하는 등 동반자관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확대하였다. 러시아는 社會主義 連帶性에 의하여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도 군사와 경제분야의 상호협력을 增大시켰는 바, 이 시기 러·북관계의 악화는 중·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分析된다. 한·러간에는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의 訪韓을 계기로 諸分野에서 우호협력관계가 구축되었다.

2. 回復期(1993年 後半期~1994年 前半期)

1993년 후반기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속에서 러·북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 모색,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 및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 노력 등으로

43) 엄밀한 意味에서 러시아의 親西方 外交政策은 後衛하는 바와 같이 대략 1992년 한 해 동안 추진되었다.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 회복되는 樣相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 러·북관계의 회복에는 러시아의 독자외교 강화가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그동안 대서양주의에 기초된 친서방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엘친 大統領은 1992년 2월 부시 미대통령과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새로운 동반과 화합시대’를 공식 선언하고 공격용 전략무기 감축과 핵확산 방지 및 우주분야의 협력 등에 合意하였다. 6월 워싱턴 마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권장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쌍무투자협정」 등이 締結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선진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을 위하여 同年 4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6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親西方 外交政策이 성공을 거두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對유럽政策을 NATO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등을 통한 동구권과 舊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내 경제침체와 러시아의 정세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對러 經濟支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는 1992년 말~1993년 초 시기에, 즉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로 교체되고 있던 시기에 친서방 외교노선을 獨自路線으로 수정하게 되었다.⁴⁴⁾ 러시아는 西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권으

44) Suzanne Crow,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6 May 1994), pp. 1~6.

로 간주하고 있는 동구와 舊소련 공화국들 및 아시아 국가들도 중시하는 정책, 즉 유라시아主義(Eurasianism)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고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외교정책 변화는 1992년 12월 1일 발표된 「對外政策文書」에서 명확히 나타나게 되었다.

亞·太地域 정책과 관련, 동 문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아·태지역이 대서양지역과 비교할 만한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신속히 轉換되고 있다는 점, 둘째, 이 때문에 모스크바는 아·태지역을 러시아의 '독특한 유라시아적 잠재력(unique Eurasian potential)'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看倣하고 있다는 점, 셋째,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다원적인 역내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아·태국가들과 균형되고 안정적이며 독자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넷째,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協力이 필요하나 동 지역의 안보확보를 위한 책임을 미국과 분담할 의향이 있다는 점.⁴⁵⁾

즉 이 시기에 러시아는 대내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한다면 냉전종식 이후의 新國際秩序에서 미국, 독일 중심의 서구, 일본 등과 더불어 다시 주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⁴⁶⁾ 이러한 判斷下에서 러시아는 역내국가간의 상호관계가 활발히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태

45)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 December 1992, p. 4.

46) Alexei Arbatov, "Empire or great Power ?" *New Times*, 1. 93, p. 24.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제반관계를 긴밀히 하고 경제적·지정학적 이해를 확보함으로써 소련의 崩壞로 약화된 자국 位相을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對러關係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에 있던 북한은 上記와 같은 러시아의 외교정책 변화를 對러關係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 유지 및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 차원에서 對北韓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3년 하반기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이전 시기의 여파로 갈등을 부분적으로 露呈하기도 하였으나 악화되었던 경제관계의 회복 모색과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및 우호관계로의 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었다.

가. 部分的 葛藤의 持續

러·북 양국은 이 시기에 북한 住民들의 러시아인 집단폭행 사건과 북한 핵 및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로 부분적인 갈등을 露出하였다.

첫째, 러시아인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1993년 7월 초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3명의 러시아인들이 북한 남포시에서 在來市場을 배경으로 비디오 촬영중 500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들을 북한의 궁색한 생활상을 찍으러 온 외국 스파이로 오인하여 집단폭행하는 事件이 발생하였다. 러시아 외무부와 피해자들은 북한측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

시키려는 러시아측의 의도적 행위”라고 비난함으로써 동 사건은 러·북간의 심각한 外交紛爭으로 비화되었다.⁴⁷⁾ 결국 러시아 정부는 7월 23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러시아내 여행을 제한하고 러시아 정부관리들과의 접촉을 禁止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미는 1993년 7월 19일 제2단계 고위급회담을 통해 3個 事項(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을 위한 IAEA와 협상 재개, 남북대화 재개,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 IAEA와의 협상 및 NPT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IAEA의 10월 1일 決議案을 거부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제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였다. 즉 옐친 대통령은 1993년 10월 訪日時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강한 우려를 表明하였으며, 코지레프와 하타 양국 外務長官은 「한반도에 관한 러·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 핵안전협정 준수를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10월 23일 러시아가 東海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러시아의 核廢棄物 투기행위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러시아가 해양오염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공공연히 違反하면서 북한의 핵협정 이행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⁴⁸⁾고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47) 「내외통신」 종합판(49) (1993. 7. 1~9. 30), p. 122~123.

48) 「내외통신」 종합판(49) (1993. 10. 1~12. 31), p. 136.

유엔總會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IAEA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월 1일 채택하였고, 서방측은 對北韓 제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을 우려하여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基本立場으로 견지하여 왔던 바, 1994년 3월 24일 외무부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을 摸索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및 IAEA가 참여하는 「8者會談」을 제의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⁹⁾ 러시아는 「8자회담」의 의제로써 한반도의 비핵지위 확보, 남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 확인, 남북한에 대한 내정불간섭 등을 提示하였는 바, 이는 북한 핵문제에 균형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을 防止하고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라고 分析된다.

同年 5월 12~13일 북한 외교부 副部長 이인규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訪러時 러시아는 북한측에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8자회담」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孫成弼 모스크바 駐在 북한大使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와 IAEA가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유감스럽지만 러시아도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편에 서고 있었다. 이 결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최근 소원해졌다”고 밝혔다.⁵⁰⁾ 또한 그는 러시아의 「8자회담」 제안에 관심

4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p. 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9 March 1994, p. 11.

50) 「내외통신」, 종합판(52) (1994. 4. 1~6. 30), pp. 109~110.

을 表明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하고 IAEA의 임의선택과 분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새로운 문제를 惹起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安保理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5월 30일 채택하였고, 한·미 등은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논의가 加速化되는 가운데 제재를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하고 6월 14일 IAEA 공식탈퇴를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IAEA 탈퇴를 NPT 탈퇴 의미로 간주하는 한편, '엄중한 후과를 招來할 위험한 결정'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평양의 호의적인 진실한 태도가 없이는 이 문제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풀어 나갈 수는 없을 것'⁵¹⁾이라는 立場을 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재하지 않고 政治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와 관련, 북한은 1만 5,000~2만 5,000명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脫走防止와 탈주 기도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설감옥소를 설치하여 이들의 人權을 오랫동안 유린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2년에 673명의 북한 벌목공들이 탈출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⁵²⁾ 러시아는 북한 당국이 벌목장에서

51) 「모스크바 방송」, 1994. 6. 14.

治外法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고, 새로운 협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극동지방의 채벌사업이 중단되고 벌목공들이 개별적 계약에 의하여 러시아에 잔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³⁾ 시베리아 산림채벌에 관한 林業協定이 1993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러·북은 1994~96년 기간중 북한의 채벌권 문제를 1993년 12월 평양에서 協議하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북한측에 自國民의 권리와 법적 이해를 존중할 것, 벌목장에서 러시아 법을 준수할 것, 人權에 관한 러시아 법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순수히 정치적인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고 불만을 表示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⁴⁾

이러한 狀況에서 시베리아를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을 한국 정부가 받아 들이기로 決定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범법자가 아닌 한 러시아 국내법 적용과 인도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자들의 한국 귀환을 허용하겠다"⁵⁵⁾고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態度를 보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1994년 5월 12일 임업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측에 同 問題에 대한 '심사숙고 대처'를 촉구하였는 바, 체제방어 차원에서 벌목공들의 한국으로의 귀순을 적극 저지하고자 하였다. 5월 12~13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인규 북한 외교부 副部長과 파

52) 1994년 5월 現在 한국에 귀순·정착한 벌목공들이 20名에 이르게 되었다.

53) 「내외통신」 종합판(50) (1993. 10. 1~12. 31), p. 133; 「모스크바 방송」, 1993. 10. 21.

54)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第106次 學術세미나, 1995. 5. 3), p. 4.

55) 1994년 4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외무장관 회담내용 참조.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5 April 1994, p. 19.

노프 외무차관의 회담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벌목장 탈출 노동자들의 북한으로의 송환 문제와 임업협정에 인권조항 삽입 문제도 論議되었다. 러시아측은 모든 외국인들이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임업협정에는 국제수준과 러시아 국내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人權條項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탈출 벌목공들을 범법자로 간주하면서 한국으로의 귀순을 저지해 줄 것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⁶⁾

上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인 집단 폭행사건과 북한 핵개발 의혹 및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 등으로 러·북간에는 이 시기에도 상호 갈등과 대립이 부분적으로 持續되었다. 그러나 러·북은 後衛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악화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고 악화되었던 외교관계를 우호관계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나. 經濟關係의 正常化 摸索

1993년 전반기까지 러시아와의 제반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던 북한은 1993년 후반기부터 對러關係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당시에 한·소수교와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1991년 舊소련 공화국들과 체결한 경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도 핵문제 때문에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經濟難에 직면한 북한은 러시아가 친서방외교를 국익 중심의 독

56) 「중앙일보」, 1994. 5. 14.

자의교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對北關係의 회복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의 對北關係 회복은 '先 경제관계 정상화, 後 정치관계 발전'이라는 형태로 모색되었다. 경제혼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도 역내국가들의 利害가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북한과 갖는 경제적 상호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 기초된 경제관계를 希望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對北韓 경제관계에 있어서 양국간 수출품의 공급지속, 舊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에 계획되었던 산업시설의 건설완료, 러시아 원자재로 북한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수입, 합작투자의 확대,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 노동력의 이용 등에 利害를 갖고 있었다.⁵⁷⁾

러·북 양국의 이와 같은 利害一致로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북한 경제대표단이 1993년 8월 6~16일 러시아를 訪問하였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무역협회 창설과 북한의 나진항을 한국, 일본, 동남아로 연결하는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構築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21개 기업들이 나진-선봉지구 하부구조 개발을 위한 1억 달러 투자계약을 9월 북한과 체결하게 되었다. 러·북간에는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히 展開되었는 바, 북한 생선과 러시아 석유의 구상무역 및 북한 신포시에서 콩치통조림의 합작생산이 시

57) Alexander Z. Zh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p. 28.

작되었고 북한에서의 러시아 선박 수리와 러시아 대학들에서의 북한 어업전문가 양성이 進行되었다. 또한 12월 평양에서 개최된 러·북 어업회담에서는 어획쿼터, 북한내 합작수산공장 설립, 카스피해와 북해에서의 어업협력 및 북한에서의 철갑상어 양식문제 등이 論議되었다.⁵⁸⁾

이와 함께 러·북 양국은 시베리아 벌목목재의 분배비율과 인권 조항 삽입문제로 難航을 거듭해왔던 새로운 임업협정의 초안에 합의하게 되었다. 1994년 5월 말 평양에서 개최된 실무협상에서 시베리아 북한 벌목공들의 인권보장과 북한 당국의 러시아 국내법 준수 및 벌목공들의 파업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협정안이 假署名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채벌목재 중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러시아는 국내목재 총공급량의 약 70%를 계속 확보하고 인권 보호국임을 대외적으로 誇示할 수 있게 되었다.

<表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에 2억 9,230만 달러에 달하였던 러·북간 貿易량이 양국의 경제난으로 1993년에 2억 2,300만 달러로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양국관계의 악화기에 경제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上記와 같은 경제관계는 경제협력을 정상화하려는 러·북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58)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p. 3; 「내외통신」 종합판(50) (1993. 10. 1~12. 31), pp. 134~135.

다. 러시아의 武器販賣 再開

이 시기의 러·북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를 재개하였다는 점이다. 舊소련은 1990년 걸프전 발발 이전까지 50餘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여 전세계 총 무기수출액의 약 39%(1989년 148억 8,7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던 세계 제일의 무기수출국이었다. 그러나 걸프戰 이후 미국의 첨단무기에 대한 수요급증과 소련의 정치·경제적 혼란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등으로 舊소련의 무기수출은 1990년 96억 6,300만 달러, 1991년 39억 3,00만 달러로 대폭 감소되었고 전세계 총 무기수출액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33%와 18%로 각각 축소되었다.⁵⁹⁾ 그러나 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 1월 17일 엘친 대통령은 경제난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의 외화획득과 군수분야 支援을 위하여 무기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強調하고 舊소련이 타국과 체결한 무기계약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추가 무기판매 방침을 밝혔다.⁶⁰⁾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각종 무기와 군사관련 첨단기술들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 第3世界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국제 무기시장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러시아는 년 150~300억 달러의 收益이 기대되는 무기수출을 통하여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目的과 背景을 가지고 무기

59) SIPRI Yearbook 1992: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272 참조.

60) Peter Almquist and Edwin Bacon, "Arms Exports in a Post-Soviet Market,"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6 (July/August 1992), p. 12.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러시아가 현재 천연자원 이외에 세계시장에서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와 군사기술이기 때문에 이의 수출확대를 통하여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둘째,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작업에 따른 失業者 급증이 사회적 긴장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군산복합체와 군수관련 산업분야를 일정수준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인을 除去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련 붕괴와 냉전종식 및 국방비 삭감 등으로 열린 정부에 대한 군의 不滿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의 불만을 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1991년의 「유럽내 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 결과로 다수의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폐기보다는 무기판매를 選好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대외 무기판매를 자국의 정치·안보적 이해와 연계시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견지라는 附隨的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⁶¹⁾

上記와 같은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러시아는 중국 등 제3세계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여 왔는데, 일본 무역회사의 중개로 1993년 11월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退役 潛水艦 14척을 ‘고철용’으로 판매하였다. 러시아가 판매한 잠수함은 태평양함대가 보유하고 있던 ‘폭스트로트(Foxtrot)’급 4척과 ‘골프(Golf)-2’급 10척으로서 이중 12척은 1961~68년에 건조된 디젤 잠수함인 것으로 알려

61) Ole Diehl, "Russland als Waffenbasar," *Europa-Archiv*, Folge 20/1992, pp. 604~605 참조.

지고 있다. 同 契約書는 옐친 대통령의 포고령에 의하여 퇴역 전함들을 고철로 판매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이에 의하면 販賣된 잠수함들은 모든 무기와 기본장비들이 제거되어 작전용으로 복원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⁶²⁾

그러나 러시아의 이와 같은 ‘고철용’을 구실로 하는 對北韓 무기판매는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였다. 이는 첫째, ‘골프-2’급 잠수함은 3기의 SS-5 해상발사 탄도미사일을 裝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한 ‘노동’ 미사일을 발사시험한 상황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 둘째, 러시아 국방부 전문가들이 잠수함 해체 등에 대한 북한의 계약이행 여부를 確認하기 위하여 현장 입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 카라신 러시아 외무부 代辯人은 1994년 1월 20일 “완전히 해체되어 전함으로서는 복원될 수 없는 몇 척의 퇴역 잠수함들을 북한이 일본 회사를 통해 구매하였으며, 우리들은 이를 正常的인 무역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사한 계약들을 타국가들과도 締結하고 있다”⁶³⁾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의 일부에서도 “아마도 북한은 잠수함, 특히 미사일체제를 주의깊게 연구하려는데 利害가 있을 것이다”⁶⁴⁾ “북한에 판매된 잠수함중 10척은 SS-N-5 탄도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Golf II’ 급에 속한다는 점에서 많은 疑問點을 제기

6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9 January 1994, p. 12.

6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1 January 1994, p. 19.

64) *Moscow News*, No.27, July 8~14, 1994, p. 4.

하고 있다”⁶⁵⁾는 등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상업적 차원을 구실로 하는 러시아의 對北韓 武器販賣가 군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⁶⁾ 對北韓 무기판매와 관련, 러시아는 세계 무기시장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등 기존의 무기시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 販路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북한에 무기판매를 再開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를 통해 “판매중단으로 야기된 북한 군사엘리트들의 좌절감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영향력의 채널을 열어 놓았고 평양의 政策決定에 모스크바의 영향력이 고려되게 되었다”⁶⁷⁾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는 前述한 바와 같은 다양한 목적과 배경 및 기존의 무기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 對北韓 영향력 제고 차원에서 실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의 러시아 무기구매는 북한 무기체계가 아직도 러시아에 依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는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이 시기 러·북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65)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p. 4.

66) 이와 관련, 1994년 5월 20일자 「이즈베스티야」지는 러시아 국방부가 對北韓 영향력 강화를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무기부품의 공급문제도 肯定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報道하였다.

67)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p. 4.

라. 外交關係 改善

1993년 전반기까지 악화되었던 러·북간 외교관계도 前述한 바와 같은 1993년 후반기부터의 경제관계 회복추세와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 및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1994년 여름頃에는 우호관계로 轉換되었다.

양국관계 악화기의 餘波로 북·소 우호조약 체결 32주년 기념행사는 1993년 7월 6일 평양과 모스크바의 양국 公館에서 간소하게 개최되었는 바, 7월 11일 평양과 북경에서 비교적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고 양국간 전통적인 친선관계 증진을 강조한 북·중 우호조약 체결 32주년 기념행사와는 對照를 이루었다. 또한 1992년 3월 체결된 「CIS군과 북한군간 92~93년도 군사교류 협력협정」에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 해군함정이 원산항을 親善訪問하는 대신 북한 함정이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拒否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⁸⁾ 이에 따라서 1992년 이후로 악화되었던 러·북간 외교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통상적인 군사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93년 8월 북한 경제대표단의 모스크바 訪問과 11월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등으로 러·북간 외교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는 바, 북한은 특히 정부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非政府間 次元에서도 러시아와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68) 「중앙일보」, 1993. 7. 31.

政府間 次元과 관련, 이인규 북한 외교부 副部長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94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파노프 외무차관 등과 일련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同 會談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와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문제에서는 異見을 나타냈으나, 양국간 정치협상과 의회간 교류문제, 「경제·과학·기술 협의위원회」의 사업착수 문제, 북한과 연해주 및 시베리아의 경제적 連繫發展 문제, 러시아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참여문제 등을 심도있게 論議하였다. 또한 同 會談에서 러시아 측은 “지난 시기에 서명된 러·북 두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앞으로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意向을 표시했다”⁶⁹⁾고 전해지고 있다.

非政府間 次元과 관련, 1994년 1월 12일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에서 러·북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기관인 「러·북 친선문화협회」⁷⁰⁾ 주최의 양국 친선모임이 開催되었다. 또한 同年 4월 북한은 김일성의 82회 생일을 맞아 러시아 연방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산당 등 보수파 高位人士들을 초청하는 한편,⁷¹⁾ 북한군 창설 62주년을 맞아 모스크바 중앙 박물관에서 북한 군사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同 展示會 개막식에서 손성필 駐러시아 北韓大使는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⁷²⁾고 말했다.

69) 「내외통신」 종합판(52) (1994. 4. 1~6. 30), p. 111.

70) 「러·북 친선문화협회」 議長은 「한국해방전쟁 참전용사협회」 會長인 폴체코 프이며, 同 協會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을 支持하고 있다.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4 January 1994, p. 40.

71) 상세한 內容에 대해서는 第IV章 1. 4節 참조.

다. 上記와 같은 러·북간 교류와 양측의 발언들은 경제 및 군사관계가 進展됨에 따라서 그동안 소원하였던 외교관계도 우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양국의 의지를 表明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러·북 사이에 정부간 및 비정부간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6월 15~18일 카터 前 美國大統領의 訪北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김일성은 카터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해 주고 核威脅 중지를 보장하면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증대되었는 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러·북간 갈등의 解消도 기대될 수 있었으며 이는 양국 우호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1993년 후반기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의 러·북관계는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인 집단폭행 事件과 카터의 평양 방문 이전까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지속 및 시베리아를 탈출한 북한 벌목공 문제 등으로 부분적인 對立樣相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러·북관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경제, 군사, 외교면에서의 양자관계 回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선 미·러관계의 변화, 즉 러시아의 친서방 외교로부터 국익 중심 독자외교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북한의 對러 接近, 양국의 경제관계 회복 노력, 외화획득 및 對北 韓 영향력 유지를 주요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무기판매 재개, 이를 통한 友好的인 외교관계로의 개선 등이 배경이 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친서방 외교정책 修正과 러·북관계의 회복 및

72) 「내외통신」 종합판(52) (1994. 4. 1~6. 30), pp. 108~109.

중·러와 중·북의 선린관계 지속으로 이 시기에는 중·러·북 3角關係가 재조정되었다. 一例로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制裁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러·북관계 악화기에 한·미·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동북아 지역의 勢力均衡이 이 시기에도 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兩者關係와 관련, 미·러 양국은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하면서도, 러시아는 對北韓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8자회담」 제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상호 견제하는 樣相을 보였다. 또한 일·러 양국도 1993년 10월 도쿄 정상회담시 북한에 핵안전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한반도에 관한 러·일 공동성명」을 採擇하였으나, 일본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퇴역 잠수함 판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러간에는 합정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군사교류 확대와 시베리아 伐木工 문제 및 1994년 6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협 수준과 한국의 對러 經濟支援 중단 등에 불만을 나타냈다. 양자관계에서의 이러한 특징들은 러시아가 이념을 초월하여 安保 利害와 경제 실익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位相을 강화하기 위한 國益 中心의 동북아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再定期(1994년 後半期~現在)

1994년 후반기 이후 1995년 9월 현재까지의 러·북관계는 김일성

사망과 북·미 핵타결이라는 韓半島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러시아의 김정일 정권 지지와 군사동맹조약의 廢棄 및 극동지역 중심의 경제 협 확대 등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4년 7월 8일 해방 이후 약 50년간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여 왔던 김일성의 急死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 김정일이 오랫동안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權力承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사후 즉시 ‘김일성은 김정일이고 김정일은 김일성’이라는 도식을 사용하여 김정일과 김일성의 一體化 作業에 주력하고 ‘김일성 유훈’의 절대교수를 표방하였다. 김일성 사망 「1백일 중앙추모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김정일은 10월 29일 檀君陵 과 11월 1일 평양 청류다리 건설장 시찰 등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실상의 주석 임무를 遂行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최초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論文을 발표하여 사회주의의 변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優越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하였다.⁷³⁾ 이와 함께 북한은 1995년 1월 1일 新年辭를 대신해 발표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무력증강과 전투태세의 강화를 促求하였다.⁷⁴⁾ 이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에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치이념

73) 「로동신문」, 1994. 11. 1.

74) 「로동신문」, 1995. 1. 1.

으로 계속 維持함으로써 대외경제 개방확대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의 침투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통치 이념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군사력을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주민들의 사회일탈 및 남한으로의 귀순 현상 등은 대내정세의 不安要因으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존속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외정책 면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摸索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5년 2월 2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폴란드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는 바, 이는 휴전체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對美 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로 分析된다.

북한 核問題와 관련, 북·미 양국은 김일성 사망 이후 속개된 3단계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兩國 首都에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 남북대화 착수 및 IAEA 핵안전협정과 NPT 의무의 완전이행 등에 관한 「제네바 基本合意文」에 정식 서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 미, 일 3국은 1995년 3월 9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사업을 지원하게 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를 國際法에 따른 국제기구로 발족시키고 KEDO 협정문안에 한국형을 명기함으

로써 한국이 對北韓 경수로 공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경수로문제 해결보다는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對美 평화협정 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⁵⁾ 북한의 이와 같은 主張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등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短期的으로는 김일성 사후 과도기에 처해 있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窮極的으로는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반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동북아 역내에서의 영향력과 위상을 아직까지 回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解決過程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과 북·미간 핵타결이라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동북아 역내에 대한 위상 회복과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의 계기로 삼고 對北韓 關係를 재정립하고 있다. 1994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북관계의 特徵은 이전 시기에 회복되었던 제반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김정일 政權 支持를 통해 양국간 외교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러·북관계는 러시아 정부의 북·소 동맹 조약 폐기 통보로 보편적인 국가간 선린관계로 轉換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량은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극동지역 중심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75) 「중앙일보」, 1995. 4. 4.

가. 러시아의 金正日 政權 支持

1994년 7월 8일 김일성 死亡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격한 변화 방지와 북한체제의 안정보장을 위한 주변국들의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적인 課題로 삼았다.⁷⁶⁾ 또한 7월 10일 옐친 대통령은 김일성 사망과 관련 깊은 조의를 표명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지도부의 교체가 양국관계를 惡化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양국간 선린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⁷⁷⁾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立場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동북아 세력균형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는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이라는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기조에 상응하는 立場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시급한 課題는 김정일 정권의 확고한 대내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원활한 推進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통해 對美, 對口關係를 정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되어 獨自的인 목소리를 내는 등 국제적 지분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던 러시아도 북·미 핵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對北韓 關係를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

76) 「중앙일보」, 1994. 7. 11.

77) 「모스크바 방송」, 1994. 7. 10.

다. 이와 같은 러·북간의 이해일치로 옐친 대통령 특사 파노프 외무차관과 이인규 북한 외교부 副部長間的 회담이 1994년 9월 20~24일 평양에서 개최되어 양국관계 강화방안이 모색되었다.

同 會談에서는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정일에 대한 옐친 대통령의 口頭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북한측도 정치·사회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북관계를 증진시킬 意向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북관계 개선과 러시아형 경수로 지원, 경제협력 및 교역 증진, 양국 교류 활성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論議하였다. 또한 양측은 러·북 외무부간의 교류안이 승인되는 등 정치적 대화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을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치적 대화를 계속 갖기로 합의하였다.⁷⁸⁾

이와 같이 對北韓 관계가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서 대안없는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認定하게 되었다.⁷⁹⁾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10월 12일 對北韓 修交 46주년을 맞아 러·북관계가 공인된 국제원칙에 대한 상호존중 원칙, 주권·내정 불간섭, 사회제도 선택의 자유권 등을 基調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양국이 선린관계, 호상보완적 연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만족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모든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킬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強調하였다. 러·북 양국이 관계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78)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3 September 1994, p. 14.

79) *Izvestiya*, 1994. 9. 28.

야 할 사항으로서는 ‘정치적 대화의 추진’이 제기되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國際會議의 개최 제안이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앞두고 되풀이 되었다.⁸⁰⁾ 북한도 또한 10월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민당 당수를 평양으로 초청하여 비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接觸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對러關係가 발전됨에 따라서 북한 중앙통신은 10월 18일 보도를 통해서 러·북관계가 쌍방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고 報道하는 한편, 양국관계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符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통신은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옛 소련 시대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힌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이같은 立場이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評價하였다.⁸¹⁾

결국 러시아는 김정일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平和共存을 유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북·미와 북·일 관계정상화에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防止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對러關係 발전을 통하여 현재의 최우선적 과제인 김정일 승계체제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80) 「내외통신」 종합판(54) (1994. 10. 1~12. 31), pp. 174~175.

81) 「내외통신」 종합판(54) (1994. 10. 1~12. 31), pp. 175~176.

나. 러시아의 軍事同盟條約 廢棄

북·소 동맹조약과 관련, 러시아는 1992년 이후 前述한 바와 같이 1996년 9월 10일까지 유효한 同 條約을 계속 유지하되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러시아는 “북한에 의하여 도발되지 않는 침략의 경우 同 條項에 의거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頂上會談에서 열린 대통령은 자동개입을 규정한 동 조약의 제1조가 사실상 死文化되었음을 밝혔다.⁸²⁾ 「모스크바 방송」도 조약체결 33주년을 맞아 7월 5일 同 條約이 소련 붕괴와 냉전종식 등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의 현저한 변모 등으로 일부 條項이 현실성을 상실했다고 밝히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공동의 이해증진 조항과 군사관련 조항이 그에 해당된다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열린 대통령과 러시아 일부에서 표명된 上記와 같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현실성 상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 특히 외무부의 公式立場은 종전과 같이 북한과의 방어적 군사동맹 관계가 조약 만료때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4년 9월 파노프 외무차관의 訪北時 동 조약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는 訪北 이후 Moscow Interfax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挑發하지 않는 침략의

82) 「조선일보」, 1994. 6. 3.

목표가 될 때 단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침략의 本質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⁸³⁾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러 정상 회담시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부품 공급과 판매를 완전 중단하기로 승意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판매된 군사무기 부품은 없으나 가능성을 排除하지 않는다”⁸⁴⁾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소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對北韓 군사무기 부품 판매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上記와 같은 二重的인 태도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둘러싼 남북한간의 경쟁관계를 최대한으로 利用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기한 만료 1년전에 조약 폐기 意思를 표명해야 한다는 동맹조약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 8월 동 조약의 폐기와 새로운 우호조약의 체결의사를 북한측에 通報하였다. 이는 동맹조약의 존폐 및 수정 여부와 관련 그동안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가 同 條約이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자국의 실정과 러·북관계 상황 및 동북아 정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結論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동 조약의 수정에 반대해 왔던 북한도 30년전에 체결된 동맹조약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提案하고 있는 새로운 조약안을 검토·분석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⁸⁵⁾

8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8 September 1994, p. 9.

84) “An Interview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Andrei Kozyrev,”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28 (15 July 1994), p. 37.

85) *The Korea Times*, September 7, 1995, p. 1; 「모스크바 방송」, 1995. 9. 8.

舊소련 共和國들 이외에는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條約案은 「한·러간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나 러·인도 조약 같은 형태의 우호협력조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⁶⁾ 즉 러시아는 이념과 군사면이 完全 排除된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 보편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냉전종식 이후의 동북아 국제질서 再編에 적극 대처하고 균형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러·북관계는 이념적인 면이 완전 배제되고 國益 中心의 선린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極東地域 中心의 經協擴大

1994년의 러·북간 무역량은 양국의 경제난과 경화결제 시행 등으로 1993년의 2억 2,300만 달러로부터 8,000만 달러로 대폭 縮小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러·북간 경제협력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이는 러·북 양국이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경협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협 수준에 不滿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⁸⁷⁾

86) 러시아가 북한측에 提案하고 있는 새로운 조약안의 주요 內容은 상호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尊重, 국내문제 불간섭, 상호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禁止, 분쟁의 평화적 解決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5. 9. 7.

87) 한·러 經協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에 대해서는 第IV章 1. 다節 참조.

러·북간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減少됨에 따라서 러시아는 1994년 후반기에 “러시아와 조선에서 (무역량) 1억 달러라는 수준은 말이 안된다”고 指摘하고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⁸⁸⁾ 또한 옐친 대통령 特使 파노프 외무차관도 1994년 9월 訪北時 양국간 무역량의 급감을 우려하고 “북한과의 무역·경제관계를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10월 평양에서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러·북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開催하기로 북한측과 合意하였다. 이후 러·북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活性化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주, 아무르주에 거의 每週 사절단을 파견하여 투자보장협정과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경제·무역협정 締結 등을 체결하는 한편, 11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경공업, 조선, 석탄채굴, 주택건설 등과 관련된 러·북 합영회사의 설립과 활동을 管理할 정무원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呼應하고 있다. 특히 사할린주가 對北韓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10월 북한의 동해와 서해에서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북한측이 사할린주에 관련 장비와 기술자를 요청하는 對價로 소비재, 비철금속, 중장비 등을 세계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사할린의 특산품을 수입하겠다는 意思를 밝혔기 때문이다.⁸⁹⁾

88) 「모스크바 방송」, 1994. 9. 26.

또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은 1992년 2월 두만강 지역에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만강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중·러·북한간의 철도와 도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狀態에 있으나 그동안 접경 3국간의 상이한 개발계획과 자본부족 때문에 실제 사업은 2국간 협력의 형태로 進行되고 있었다.⁹⁰⁾ 특히 러시아는 두만강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 바, 이는 독자적으로 나호트카-보스토치니 특구를 시베리아철도 연결수송의 중심지와 배후공단으로 開發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나진-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도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국경부터 나진까지 도로 復舊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동해로의 출로를 모색하고 청진항에서 영향권을 이미 확보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나진-선봉 지역개발에 대한 參與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나진 所在 「러시아 극동 대외경제협회」 대표부를 중심으로 나진항을 극동지역의 화물기지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具體化하고 있는 바, 북한과 나진항 2호 부두의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두만강-나진간 철도 수송능력 확대를 위한 공동 사업을 協議하였다. 러·북은 소비재를 공동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89) 「한겨레신문」, 1995. 1. 29.

90) 두만강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金圭倫,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등 참조.

자본금 1억 루블 규모의 양국간 최초의 합營企業인 「조·러 상업센터 주식회사」를 창설하였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나진호텔을 건설 중이며, 「조·러 무역회의소」가 1994년 여름부터 업무를 開始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¹⁾

또한 러·북간에는 시베리아 벌목공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보았으나 채벌목재의 지분할당 등 경제적인 利害關係 차이로 假調印 상태에 있던 새로운 입업협정이 1995년 2월 24일 평양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양국은 8시간 노동 등 러시아내 북한 벌목공들의 인권보장,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작업하게 될 북한 벌목공의 數, 이들이 생산할 원목의 배분비율 등에 최종 合意한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입업협력으로 연간 약 5,700만 달러의 이윤을 얻게 되었으며, 총 7,000명의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作業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⁹²⁾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994년 후반기부터 1995년 9월 현재까지의 러·북관계는 經濟面에서 양국 무역량의 감소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겐 김일성 사망과 제네바 북·미 핵타결 이후 북·미와 북·일 接近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의 가속화 가능성이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직면하게 된 러시아는 東北亞地域에서 유리한 안보환경을 유지하고 아태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過渡期 상태에 있는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91) 「모스크바 방송」, 1994. 8. 25, 12. 22.; 「한겨레신문」, 1995. 1. 29.

92) 「내외통신」 종합판(55) (1995. 1. 3~3. 31), pp. 137~138.

북한과의 냉전시대 동맹관계를 보편적인 국가간 선린관계로 轉換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 김일성 사후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 구축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經濟面에서는 러·북 양국의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경협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핵심 利害地域인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군사동맹의 단절 등 러·북관계의 再定立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동맹조약을 兩軸으로 하던 북한 안보체제의 약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를 意味한다. 그러나 한·미·일이 북한체제를 아직까지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 양국은 김정일 政權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역내 초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러·북관계의 재정립으로 동북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직도 過渡期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兩者關係와 관련,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불만을 갖기도 하였으나 북·미간 核妥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미와 북·일 修交 可能性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위하여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國際會議의 개최 및 「동북아 안보체제」의 前段階로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약체」의 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핵심 동맹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亞·太 安保體制를 검토하고 있는 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둘러싼 미·러간 意見相異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러 양국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들에는 相互 協力을 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제로 인한 葛藤 속에서도 對日關係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국방예산과 군현대화 계획 등 일본의 방위관련 문제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투명성 확보 程度는 북방영토 문제 등 러·일간 현안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균형된 관계유지가 국익을 최대한 保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과도 정치, 경제, 안보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構築하려 하고 있다.⁹³⁾

93) 겐나디 추프린, "21세기 東北亞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안보적 역할," 「21세기 東北아시아」(光復 50주년 기념 國際 심포지엄)(서울 힐튼호텔, 1995. 8. 1~3) 참조.

第 IV 章 러·北關係 展望

前述한 바와 같이 신생 러시아가 출범한 1992년 당시에 악화된 상태에 있던 러·북관계는 1993년 후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 후반기 이후로는 제분야에서 재정립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尙後 러·북관계 발전의 폭과 속도는 동북아 역내 평화와 군사력 균형 및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러·북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과 양국간에 표출되고 있는 갈등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러·북관계를 展望하고자 한다.

1. 兩國關係 強化要因

현재 러·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인 地政學的 利害,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對北韓 영향력 유지 노력, 한·러 경험수준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러시아 보수파 지도자들과 북한의 接觸 擴大 등이 양국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가. 北韓에 대한 러시아의 地政學的 利害

러시아인들은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전략적 이해가 상호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歷史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이 불안정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북한지역을 緩衝地로 삼거나

자신의 영향권하에 두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帝政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影響力을 제한하기 위하여 39도 以北 한반도 지역의 중립지대 설정을 제안한 바 있다.⁹⁴⁾

舊소련도 1945년부터 1991년 말 붕괴될 때까지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영향력 擴大를 위하여 지정학적인 면에서 북한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推進하였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시 전후 일본 점령에 대한 참여 의도와 미국과의 대립 우려 때문에 트루먼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38도선 分割提議에 반대하지 않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하여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 舊소련은 동서 냉전기에 미국의 對소 封鎖政策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소분쟁 시기에는 중국 견제와 북한의 對中 편향방지 및 對北韓 영향력 견지를 목적으로 1961년 체결된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냉전기와 고르바초프 전기에 舊소련은 아태지역으로의 군사적 행동반경 확대를 위하여 북한을 군사전략적 橋頭堡로 이용하였다.

냉전종식과 소련의 붕괴로 세계적 차원에서는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의 國際秩序는 아직도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과도기 상태에 있는 바, 러시아는 정치·군사 상황이 불안정한 동북아지역을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94) 金容九, 「世界外交史(上) - 빈會議에서 1次大戰 前夜까지 -」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1), p. 422.

看做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접경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전략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⁹⁵⁾ 前述한 바와 같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同盟條約 폐기 이후에도 새로운 조약을 기초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인들의 북한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는 帝政러시아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 러·북관계를 강화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北·美와 北·日修交 可能性

舊소련은 1945년 이후 약 45년 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1961년 동맹조약을 기초로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對北韓 영향력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출범 이후부터는 對北韓 관계의 악화로 기존의 영향력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1993년 후반기부터 양국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현재 再定立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는 북·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가능성이 高潮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아태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對北韓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1988년 12월부터 北京에서 참사관 접촉을 통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접촉을 시작하였으나, 북·미간 접촉은 1990년

95) *Daily Report: Soviet Union*, 24 December 1991, pp. 6~7.

초부터 대두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로 跛行的인 양상을 보였다. 3차에 걸친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고 同 合意文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함께 양국 首都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북·미 양국은 현재 적절한 사무소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여 핵 투명성을 계속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KEDO의 경수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북·미수교는 可視化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교섭에도 積極性을 보여왔다. 북한 노동당은 1990년 9월 평양에서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간의 3당 공동선언을 통하여 조속한 수교를 위하여 努力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1991~1992년 일본과 8차에 걸친 수교교섭을 進行하였으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차이와 보상문제, 북한의 국가승인 문제, 이은혜와 북한 핵 및 남북대화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4년과 1995년 초에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의 양국간 막후접촉과 예비접촉이 再開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북한 쌀 지원과 김일성 사망 1주기를 맞아 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 의사를 표명한 김정일에 대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전문 등으로 북·일수교가 時間問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미와 북·일수교의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북한 核問題의 해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불만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 직후 “미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의 運命을 결정할 유일국이 되려는 목적

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한국 一邊倒의 외교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외교를 적극 펼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서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관계와 정치적 對話를 원하는 평양의 희망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⁹⁶⁾ 따라서 김일성 死亡과 북·미 핵타결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東北亞 情勢, 특히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상실을 방지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對北韓정책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韓·러 經協에 대한 러시아의 不滿

한·러간 경제관계에서는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強化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양국간 무역량과 무역구조, 한국의 소극적인 對러 投資 및 경제지원 중단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러간 貿易量은 <表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의 동북아 역내무역에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1993년도 한·러간 무역량은 단지 9%(러시아의 동북아 역내무역중 對韓國 수출은 10%, 수입은 7%)에 불과하다. 한국은 북한(2%)보다 앞서 있으나 중국(43%), 일본(24%), 미국(20%)보다는 훨씬 뒤지고 있다.⁹⁷⁾ 또한 한국의 對北方

96)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亞洲局 副局長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紙 기고문, 「중앙일보」, 1994. 11. 9.

97) 러시아의 동북아 域內貿易 推移에 대해서는 余仁坤, 「韓國의 對러 經濟協

貿易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8%(수출 7%, 수입 8%)와 13%(수출 8%, 수입 19%) 정도이다. 이는 러시아의 정세불안과 경제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을 아직까지 중, 미, 일 다음의 3류시장이나 재고품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固定觀念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한-러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 무역장벽의 除去 및 양국 무역파트너간의 상호신뢰와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構築을 희망하고 있다.⁹⁸⁾

또한 貿易構造 面에서 러시아는 현재 한국 소비재의 수출시장 및 원자재와 천연자원의 수입시장으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정부가 한국 소비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량의 원자재와 천연자원 수출을 必要로 하는 바, 러시아는 자원고갈을 우려하여 對韓國 무역관계의 구조를 시정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對韓國 經協에서 최대 관심사항은 투자분야인 바, 1992~1995년 기간중 승인된 한국의 對러 投資事業案은 56건, 5,300만 달러이며, 이중 1995년 1월 1일까지 실질적으로 33건, 2,73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對中 投資는 같은 期間中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반면, 對러 投資는 3,000만 달러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의 對러 投資額(55억 달러)에 대한 비중이 거의 0%에 가깝고 대부분의 한국기업 투자액은 5

力 推進方向」(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 21, <表 3> 참조.

98) D. V. Morozov, “한-러 경제무역 협력전망,” 『북방통상정보』(1994. 6), p. 32.

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에 불과한 實情이다. 특히 투자규모가 큰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착수는 1990년대 후반에나 가능한 狀態에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의 對러 投資 건수 증가, 투자지역과 분야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對中 投資規模에 훨씬 못미치는 소규모 투자에 불만을 갖고 있는 러시아는 한-러간 투자협력이 潛在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⁹⁹⁾

한-소 양국은 국교수립 직후인 1991년 1월 한국이 舊소련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1993년 기간중 30억 달러의 경제자금을 제공하기로 合意하였다. 1991년 한국정부는 현금차관 10억 달러와 소비재 차관 4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나 소련의 崩壞로 인한 지급보증 주체의 불확실과 이자지불 지체로 1991년 12월 27일 이후 잔여차관 제공을 중단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이미 제공된 차관 원리금과 이자의 償還을 잔여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홍순영 당시 외무부 차관은 1993년 8월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經濟支援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잔여차관 제공의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¹⁰⁰⁾ 러시아는 서방의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국가들이 취한 것과 동일한 조건의 채무상환 연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은 「파리클럽」 會員國이 아니라는 이유로 同 要請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99) V. D. 안드리아노프, “한-러 통상·경제 협력의 현상향과 그 전망,” 中央日報 現代史研究所 주최 모스크바 國際學術포럼 「21세기 대평양시대의 한반도 전망」 發表論文 (1995. 5. 30~31.), p. 72.

10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30 August 1993, p. 21.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의 채무상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취해진 일방적인 동결조치”¹⁰¹⁾라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1994년 협상 결과 한·러간에는 러시아 채무의 단계적 상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1995년 5월 현재 러시아의 對韓國 총 채무액은 14억 달러이며 이중 채납금에 대한 가산 이자액을 포함한 체불액이 4억 5천만 달러이다.

러시아는 한·러간의 경제협력이 안정되고 있으나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上記와 같은 문제점들에서 찾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을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전략 于先順位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즉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 정부가 무역, 투자 등 諸般의 대외경제 협력 중점을 중국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02) 한·러경협에 대한 러시아의 이와 같은 불만들이 러시아 정부가 1993년 후반기부터 북한과의 경제관계 回復을 모색하게 되고 1994년 후반기부터는 극동지역 중심으로 경협을 강화하고 있는 원인들 중의 하나라고 分析된다.

라. 北韓과 러시아 保守派의 接觸 擴大

非政府間 次元에서 러·북관계의 특징은 북한이 러시아의 극우·보수 정당인 자민당 및 공산당과의 紐帶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엘친 대통령은 1993년 가을 개혁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던 보수

101) “쿠나제 주한 러시아대사 인터뷰,” 『조선일보』, 1994. 5. 26.

102) V. D. 안드리아노프, “한·러 통상·경제 협력의 현상향과 그 전망,” p. 70.

과를 무력진압하는 한편, 12월 12일 러시아 역사상 最初로 다당제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新憲法을 마련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연방하원인 국가두마에서는 極右·保守政黨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¹⁰³⁾ 북한은 1994년 4월 15일 김일성의 82회 생일을 계기로 이들과의 親善 및 連帶를 모색하였는 바, 자민당 副委員長 겸 연방의회 副議長인 웬게로프스키 일행과 러시아 공산당의 지방조직인 하바로프스크 변강위원회 제1비서, 연해주 변강위원회 대표단, 아무르주 위원회 대표단 등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黃長燁 당비서, 金炳植 부주석 겸 사민당 위원장, 楊亨燮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과 회합을 갖고 양국간 친선증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민당 黨首는 6월 21일 김일성에 보낸 「연대성 편지」를 통해 “역사적으로 조선이 외래침략을 물리쳐야 할 때가 왔을 때 러시아 인민은 성의있게 조선을 도왔다”고 主張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쌍방간의 연대강화를 역설하고, 북한의 대외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支持를 표명하였다.¹⁰⁴⁾

북한은 김일성 死後에도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對北韓 접근과 관계강화 노력에 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노동당과 러시아 자민당간의 연대를 계속 긴밀히 하였다. 즉 북한은 1994년

103) 450명으로 構成되는 러시아 국가두마의 議席分布는 대체로 개혁파 32%, 중도파 23%, 극우·보수파 43%로 나타나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pp. 11~12.

104) 「내외통신」, 종합판(52) (1994. 4. 1~6. 30), p. 112~113.

10월 3~5일 지리노프스키를 평양에 초청하여 黃長燁 당비서 등 당, 정 간부들과 兩黨間의 친선관계 발전 및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 같이 러시아 보수파들과의 이념적, 인적 유대관계를 緊密히 하고 있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러시아 연방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고, 中長期的으로는 보수파의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조·소 친선 협회」는 공산계 日間紙 「프라우다」에 “한국으로부터 경협을 따내기 위해서도 북한 카드를 버려서는 안되며 북·소 동맹조약 제1조의 폐지를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¹⁰⁵⁾

북한과 러시아 연방하원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파간의 이와 같은 긴밀한 연대성은 非政府間 次元에서의 러·북관계 강화와 러시아 정부의 對北韓 政策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兩國間 葛藤要因

러·북관계에서 현재 表出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對러 債務償還 문제, 러시아에서 북한의 불법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05) 「조선일보」, 1995. 8. 3.

가. 北韓의 人權問題

북한은 철저히 폐쇄적이며 통제되어 있는 사회체제를 갖고 있는 바, 주민들에 대한 인권억압과 정보통제 機構가 발달되어 있으며 인권이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분야에서 廣範圍하게 통제, 유린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최악의 상태로 만드는 理論的 基盤이 되고 있다. 북한의 법체제는 「김일성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노동당 결정」, 헌법, 일반 법률 등의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과 일반 법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들을 보장하기 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쑤'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行爲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주요한 人權 彈壓 機構들은 당과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국가기관 및 수용소들이다. 북한의 인권탄압 표본은 「特別獨裁對象區域」으로서 주로 정치사상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독재구역은 적어도 14개소에 이르고 있고 收容人員은 약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제21조에는 '로동교화형'이 있는 바, 이는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 그 자체가 형벌로 되어 있으나, 「로동敎化所」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비인간적 고문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⁶⁾

러시아는 현재 민주주의, 인권, 국제안정 등 인류의 共同價値에 기초하여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再定立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편적 국가관계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는 1992년 1~3월 「제네바 인권문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 거론한 바 있으며, 모스크바 大學의 북한 留學生 김명세에 대한 정치적 망명과 한국 방문을 1993년 10월 허용하였다. 또한 前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공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들을 현지조사하여 이의 是正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업협정에는 국제인권 기준과 러시아 국내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貫徹시켰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1995년 8월 1일부터 「정치망명 절차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는 바, 同 法律 제정의 취지는 시베리아의 북한 벌목공과 아프칸 난민 및 독립국가연합 難民의 러시아 망명조건을 대폭 완화하려는데 있다. 이에 따라서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 정부의 公式的인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직접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와 같은 人權概念 적용은 러시아가 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대외적으로 誇示하는 한편, 國際社會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문제로 간주하겠다는 意圖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이와 같

106)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해서는 全賢俊,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참조.

이 현재 對北韓政策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양국간 외교관계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北韓의 對러 債務問題

소련의 붕괴 직전 북한은 39억 4,700만 달러(22억 3,400만 루블)의 對소 債務을 갖고 있었으나, 1992년 러·북은 북한의 對러 債務額을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하여 32억 루블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이 당시 달러 변제를 거부하고 對러 債務을 신용차관 17억 루블과 무역에 의한 채무 15억 루블로 구분하여 상환하기로 約束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은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한 1차 결의안 채택에 적극 가담하게 되자 채무상환 拒否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¹⁰⁷⁾ 또한 북한은 1993년에 의무를 진 13억 루블을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對러 債務償還 문제가 양국간 현안중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10억 루블 상당의 채무를 물품으로 상환하는데 同意하였다.¹⁰⁸⁾

그러나 1993년에 산정된 북한의 외채는 103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1993년 5,4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對러 輸出이 그나마 減少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총 32억 루블에 달하는 부채를 언제 상환할 수 있을 지는 不分明하다. 야코

107) *Izvestiya*, 1993. 5. 20.

108) *Moscow News*, No. 36, September 9-15, 1994, p. 5.

블레프 러시아 의무차관도 1994년 1월 20일 「모스크바 放送」과의 회견에서 “1990년 가격으로 30억 루블을 초과하는 북한의 對러 債務를 재조정해야 하며, 채무상환은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협차원에서 解決되어야 한다”¹⁰⁹⁾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對러 채무상환 문제는 양국간 경제협력에 큰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러시아內 北韓의 不法行爲

현재 러시아에서는 북한 정보기관원들에 의한 마약 밀매와 핵무기 관련 부품에 대한 스파이 活動, 시베리아 탈출 벌목공으로의 위장을 통한 공작활동 등 불법행위가 恣行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북한의 마약 밀매와 핵관련 물질 정보활동이 최근 수년간 活潑해지고 있는 바, 1994년 6월 9일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접경 해안지방에서 2명의 북한인이 100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 약 8kg을 밀매하려다가 러시아 경찰에 逮捕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승인을 받아 마약 밀매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북한 정보기관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美國 中央情報局(CIA)이 러시아 핵물질의 북한 유입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정보기관원으로 보이는 5명이 최근 핵무기 제조용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반출하려다가 러시아 聯邦防諜局(FCS)에 체포되어 국외추방되었다.¹¹⁰⁾

109)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21 January 1994, p. 21.

110) 「세계일보」, 1994. 6. 28.

이외에도 북한은 정보기관원들을 시베리아 탈출 벌목공으로 僞裝시켜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연해주에는 한국인 宣教師들이 운영하는 敎會가 45개 있는 바, 북한은 이들 敎회들이 시베리아 탈출 벌목공들을 도와주는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判斷하고 감시해 왔다. 1995년 3월말 하바로프스크에서 발생한 在美僑胞 선교사 이주현씨 夫婦 피살사건과 관련, 러시아 日間紙 「이즈베스티야」는 동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시베리아 탈출 북한 벌목공이 북한의 비밀요원일 수도 있다고 報道하였다.¹¹¹⁾

러시아에서 上記와 같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핵무기 관련 부품의 반출시도는 러시아 마피아 조직과 連結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憂慮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FCS도 러시아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공작활동을 注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러·北關係 展開方向

上記와 같은 러·북관계의 강화요인과 갈등요인 및 양국의 국내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의 러·북관계는 정치, 안보·군사, 경제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豫測된다.

가. 政治面

첫째, 러·북 양국은 理念的 差異에도 불구하고 1994년 후반기 이

111) *Izvestiya*, 1995. 8. 11.

후 재정립되고 있는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이 체결될 조약과 정치적 대화의 확대를 통해 發展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간 선린우호관계의 심화 정도는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접근 속도와 폭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는 일부 개혁정책의 성과들이 나타나 혼란상태를 탈피하고 회복기로의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¹¹²⁾ 그러나 러시아 정국은 옐친 대통령이 현재 중도파와 급진개혁파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 연방의회의 과도기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不安定한 安定(fragile stability)'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러시아 정국은 1995년 12월 차기 총선과 1996년 6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에 대비한 제정파간의 이합집산으로 현재보다 더욱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김일성 死亡과 북·미 핵타결 이후 북·미와 북·일수교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호적인 안보환경 造成이라는 동북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특히 접경국가인 북한과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持續하려 할 것이다. 북한도 주석과 당총비서 職에 대한 김정일의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적 고

112) 러시아는 1994年 中盤까지 소기업에 대한 私有化를 사실상 완료하고 대기업과 중간규모 기업의 사유화를 약 70% 達成하였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1995년에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을 포함한 국내 총생산 및 투자 등의 前年對比 하락율이 - 2%로 각각 대폭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이 年 150% 수준을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105억 달러의 赤字를 기록함으로써 러시아 경제는 1996년부터 전반적으로 好轉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3th quarter 1994 & 4th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참조.

립탈피를 위하여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동북아 정책기조를 堅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러시아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對러關係에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하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파의 집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민당, 공산당 등과의 人的交流와 연대를 확대할 것으로 豫測된다. 러시아 보수파들은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10대 강령」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 등을 支持하고 있는 바, 이들의 친북한 활동 강화는 러시아 정부의 對北韓政策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러·북 양국간 선린우호관계가 정부차원과 非政府次元에서 발전되더라도 양국관계 강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인권개념 적용과 북한의 러시아내 마약 밀매 등은 부분적으로 향후 양국의 外交摩擦을 惹起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對러關係 강화를 희망하더라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난과 對北韓 關係 강화시 수반될 수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 및 북한의 돌발적 행동 가능성 등을 考慮할 것인 바, 향후의 러·북관계가 短期間內에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서 1995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정치망명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베리아를 脫出한 북한 벌목공들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직접 亡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벌목공들의 數가

급증하는 경우, 이를 둘러싼 러·북간의 葛藤再現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러시아에서 마피아들과 연계하여 마약 밀매를 계속할 것인 바, 이는 러시아 정부와 外交摩擦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나. 安保·軍事面

첫째, 러·북 양국은 동맹조약의 廢棄에도 불구하고 안보차원에서 한·러관계 경우와 같이 군 고위인사들의 교류와 합정의 상호방문 등을 통한 軍事協力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重視하면서 亞·太 強國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된 군사협력 관계,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접근에 따른 기득권 상실 방지 및 경협 유도 등 한국에 대한 지렛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화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第3世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화획득과 對北韓 영향력 제고차원에서 군사무기와 부품을 북한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러시아는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여전히 提議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관련 부품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반출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인 바, 이는 안보·군사면에서 양국간 갈등을 노정할 것으로 展望된다.

러시아는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評價하면서도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회의의 開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회의의 당사국들이 대부분 親美國家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참여시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회의의 개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¹¹³⁾ 이에 따라서 同問題를 둘러싼 러·북간 의견상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對美 修交 이후에도 최후의 생존카드인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핵관련 부품과 기술을 반입하려는 북한의 不法行爲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韓半島 非核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다. 經濟面

첫째, 러시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경제 구조가 정착되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할 것이며, 제한적인 對外開放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도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단기간 내에 回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러·북 양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들 및 중국과의 경협확대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러·북 양국의 全般的인 경협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113) 손성필 駐러 北韓大使의 1994년 4월 인터뷰 參照.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14 April 1994, p. 14.

둘째, 그러나 러·북 양국은 경협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短期的으로 러·북간 경협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增大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지역에서의 양국간 경협은 러시아가 천연자원과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고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건설분야에 參與하거나 완제품을 再輸出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협수준에 계속 불만을 갖는 경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러·북간 경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豫測된다.

셋째, 1993년 현재 북한의 外債는 103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對러 輸出이 5,4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32억 루블에 달하는 북한의 對러 債務問題는 장기간 양국 경협확대의 장애요인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第 V 章 韓國의 對應方案

향후의 러·북관계가 정치, 안보·군사, 경제면에서 上記와 같이 전개된다고 假定할 때, 우리 정부는 對러關係를 강화하고 안보 및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공고히 하며 북한의 改革·開放 誘導를 통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1. 政治面

短期的으로 우리 정부는 對러 同伴者關係를 강화하기 위하여 엘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1996년 6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인기가 음주벽과 건강문제 등으로 최근에는 10% 이하로 下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엘친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측근인사들을 主要 要職에 임명하는 등 재집권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재집권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대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뚜렷한 인물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중도보수파 체르노미르딘 總理와 개혁파 리즈코프 모스크바 市長, 온건개혁파 「야블로코 연합」의 야블린스키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연방의회의 보수파 지도자들은 북한의 統一政策 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북한 방문이 러·북관계를 강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연방의회와의 人的 交流를 확대하되, 러시아 자민당의 親北韓 人士인 「벤게로프스키」 연방하원 副議長 등을 副議長 자격으로 초청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과 관련, 러시아는 아직까지 KEDO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KEDO 준비회의에 대표파견 등을 통해 자국의 일정한 役割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阻止하기 위하여 국제공조체제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양자간 차원에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사업을 再開하려 하고 있다는 점 및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있는 경우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KEDO 내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주요 부분공사에 대한 참여의 配慮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치개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人權問題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휴전협정 이후 불법납치한 450餘名の 남한인사들을 조속히 송환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등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에 인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의 중개 역할을 요청하는 外交的 努力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 탈출 벌목공을 假裝한 북한의 비밀요원들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탈출 벌목공들을 도와 주는 한국인 선교사 운영의 교회들에 대한 監視活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

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측에 이들의 不法行爲 방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中長期的으로 러시아는 북·미와 북·일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對北韓 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편향적인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가능성을 견제하고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頂上會談이 개최된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적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러시아는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이에 積極的으로 참여할 것으로 豫測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반적인 관계강화를 위한 외교적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安保·軍事面

短期的으로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은 러시아가 외화획득과 對北韓 영향력 제고를 위하여 상업적 차원과 방어용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를 재개할 可能性이 크다는 점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관련 부품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고 계속 시도할 蓋然性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對北韓 무기판매 재개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회구하는 러시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러시아 정부측에 周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政府는 핵관련 부품의 북한으로의 밀수출과 핵기술자들의

개별적인 북한 방문의 철저한 防止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擴大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亞·太지역에 대한 중요한 러시아 외교정책들이 駐韓 大使를 역임한 바 있는 파노프 의무차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中長期的으로 우리의 안보 및 한반도 평화구축과 직결되는 事案은 북한 핵에 대한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와 남북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이다. 북한은 핵개발 作業을 한국전쟁 이후에 시작하였고 한·소수교를 계기로 본격화 하였으나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동결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러시아 日間紙 「이즈베스티야」도 미국이 수교를 통해 북한 정권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은 새로운 흥정과 위협을 위하여 核開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現 體制가 존속하는 한 핵문제의 이성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¹¹⁴⁾ 러시아는 韓半島 非核化政策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군사교류에 관한 諒解覺書를 러시아 정부와 새로이 체결할 때 북한 핵관련 정보들의 상호교환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당사자간 協議·解決과 주변 관련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한국을

114) *Izvestiya*, 1994. 6. 15.

排除한 북·미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문제는 남북한간의 立場差異로 短期間內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현 휴전협정이 국제법적으로 承認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平和體制가 형성될 때까지는 유효하며,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¹⁵⁾ 우리 정부는 북한의 對美 平和協定 체결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주지시킴으로써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지지를 誘導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이를 향후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會議」 등이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의 二重構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對美 平和協定 체결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회의」 등을 構成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方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 지역의 광범위한 협력을 기초로 하는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判斷된다.

115) "One on One: Alexander Panov Russ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p. 38.

3. 經濟面

短期的으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對러 經協, 특히 러시아 정부의 주요 利害事項인 對러 投資를 러시아 경제의 회복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러 경협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極東地域에서 오히려 북한과의 경협확대를 摸索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작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러시아의 시장경제 정착과 한·러 경협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3角經協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는 바,¹¹⁶⁾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방유도 차원에서 이를 肯定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同 事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假稱 「한·러·북 경협자문위원회」 등의 실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3角經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및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를 協力地域으로 하고 소비재 생산과 농업, 임업, 어업을 協力分野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中長期的으로 한국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러시아의

116)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협력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1994. 1), pp. 128~30 참조.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러시아 改革의 성공여부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連繫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시장경제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長期間을 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참여는 미국 및 일본 등과의 공동참여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判斷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前述한 바와 같은 한·러·북 3角經協이 진전되는 경우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協力地域을 북한의 경제특구로부터 타지역으로 확장하고 協力分野도 광물과 에너지 자원개발 및 공장건설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誘導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金圭倫.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3. 20.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 第6集, 1987.

金容九. 「世界外交史 (上) - 빈會議에서 1次大戰 前夜까지 -」. 서
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1.

民族統一研究院. 「日本の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
代 東北亞秩序 豫測(II)-」.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研究報告書
92-04, 1992. 10.

余仁坤.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報告書 94-03, 1994. 9.

全賢俊.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報告
書 93-12, 1993. 10.

鄭一永 編. 「韓·러 關係와 金泳三 大統領: 러시아의 對韓半島 關
係 資料集(1986~1994)」. 城南: 世宗研究所, 1994.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
究院. 1992. 12.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199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1st
quarter & 3th quarter 1994 & 4th quarter 1994*. London:

EIU, 1994.

-
- Country Report: South Korea, North Korea*. no. 1. London: EIU, 1993.
-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s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 Knapp, Manfred and Krell, Gert (eds.). *Einfue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ue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 Park, Jae Kyu and Ha, Joseph M.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 SIPRI Yearbook 1992: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Sowjetunion Heute*. Nr. 10, Oktober 1988, Dokument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6*. vol. VIII. Washington D. C..

2. 논 문

젠나디 추프린. “21세기 東北亞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안보적

- 역할.” 光復 50주년 기념 國際 심포지엄 「21세기 東北아시아」. 서울 힐튼호텔. 1995. 8. 1~3.
- Morozov, D. V. “한-러 경제무역 협력전망.” 「북방통상정보」. 1994. 6.
-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 북한, 러시아 3각협력 가능성 모색.” 「북방통상정보」. 1994. 1.
- 안드리아노프, V. D. “한-러 통상·경제 협력의 현상학과 그 전망.” 中央日報 現代史研究所 주최 모스크바 國際學術포럼 「21세기 태평양시대의 한반도 전망」. 發表論文. 1995. 5. 30~31.
- Yakubovsky. “러시아-북한간의 경제협력: 문제점과 전망.” 漢陽大 學校 中蘇研究所 學術세미나. 1995. 5. 3.
- 트카첸코. “러시아-북한관계의 변화와 양한관계 영향.” 漢陽大 中蘇研究所 세미나. 1993. 5. 24. 「주요자료 전문집」. 연합통신. 1993. 6. 1.
- “An Interview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Andrei Kozyrev.”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28 (15 July 1994).
- Arbatov, Alexei. “Empire or great Power?” *New Times*. 1. 1993.
- Ball, Desmond. “Arms and Affluence: Military Acquisi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 Crow, Suzanne. “Why Has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d?”

- RFE/RL Research Report*. vol. 3, no. 18. (6 May 1994).
- Davydov, Oleg. "Soviet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0, no. 2, 1990.
- Diehl, Ole. "Russland als Waffenbasar." *Europa-Archiv*. Folge 20/1992.
- "One on One: Alexander Panov Russian Ambassador to South Korea." *Defense News*. January 25-31, 1993.
- Shipaev, Victor I. "A New Russian Perception of South Korea." in Il Yung Chung (ed.). *Korea and Russia: Toward the 21st Century*.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2.
- Stefashin, Viktor. "Scenarios: Development of the Military-Political Situation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2, 1992.
- Titarenko, Mikhail L. "Disintegration of the USSR;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and the Russian Policy in the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 Zagoria, Donald S. "The Kremlin Looks Bad in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I, no. 1 (Spring/Summer 1983).
- Zhebin, Alexander Z.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Oct. 13~14, 1992).

ロシア東歐貿易會. 「ロシア東歐 經濟速報」. no. 977. 1995. 1. 15.

3. 기 타

「내외통신」. 종합판 (42) (1990. 7. 1.-12. 31), (45) (1992. 1. 1~6.
30). (47) (1993. 1. 1~3. 31), (49) (1993. 7. 1.-12. 31), (50)
(1993. 10. 1~12. 31), (52) (1994. 4. 1~6. 30), (54) (1994.
10. 1-12.31), (55) (1995. 1. 3~3. 31).

「讀賣新聞」.

「로동신문」.

「모스크바 방송」.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Izvestiya

Moscow News.

Pravda.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
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
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
AL UNIFICATION(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研究報告書 95-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9月 日

發行日 1995年 9月 日
